



사드 배치, 미사일방어(MD) 편입, 한미연합훈련 ... 박근혜 정부 대외정책은 한반도와 주변정세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 관련 기사 2~4, 12, 13면

박근혜 정부
대외정책의
위험성

4 ~ 5면

미사일 방어는
핵 선제공격
위한 것

12면

전쟁을 끝낸 역사적
노동자 운동 경험

13면

총선과
노동운동 추의 대응

6 ~ 7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8 ~ 11면

임금 삭감에
'다걸기' 한
사용자들

16면

공무원 성과급
반대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5면

누구의 낚시까요?

“미국은 유럽 난민 문제를 유럽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민들의 핵심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나토의 [지중해 해상 순찰] 임무를 강화했다.”

군함 동원해 난민을 막는 게 난민 문제 해결이라는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

“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 /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

새누리당 김을동,
이것은 박근혜 디스인가, 찬양인가

“전자파, 이런 건 처음 듣는 이야기”
새누리당 김무성의 너무 무성위한 사드 옹호

“우리는 조선족이 있어서 문화쇼크를 줄일 수 있다.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 / “싱글족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냐.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해야 한다. 나는 이미 실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저쪽에선 권총을 우리 이마에 겨누는데 우리는 칼만 가지고 대응했다. 이제 우리도 권총을 들 때가 되지 않았나”

헬조선도 부족해 핵조선으로 가자는

새누리당 원유철

“왜 평택을 꼭 집어 이야기하느냐”
핵무장하자던 새누리당 원유철,
선거 앞두고 내 지역에 사드라니!
박근혜 고향으로 보낼 순 없잖수~

“졸업생들에게 정말 실망했다.” /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 · 고려대 · 이대 · 숙대에 간 학생들이 여기서 3분의 1도 안 된다.” / “이 학교를 위해 2백억 원을 투자했다. 세계 명문 여학교로 크길 바란다.”

서울 강남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이사장의 축사(?)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

★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샌더스 열풍 “샌더스는 체제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맞선 효과적 투쟁 건설을 위해**

★ **신인사원 이중임금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 **기본소득 운동 — 반자본주의적 전장에서 후퇴하지 말아야**

★ **서평 《만화로 보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마르크스의 혁명적 경제사상에 대한 생생하고 친절한 가이드**

★ **서평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왜 사회는 여성을 ‘여성성’에 옥여넣으려 할까?**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김영익

북한이 1월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 단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만 악화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4대 열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 경쟁과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6시간도 안 된 시점에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공식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어도 5월까지의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의 핵심적 일부인 사드 배치가 급진전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등이 호들갑 떨며 강조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매우 과장돼 있다. 비록 북한이 이번에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위성과 로켓의 기술적 수준은 미국 ·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에 견줘

수십 년 뒤쳐져 있다. 북한이 핵폭탄(10기 안팎으로 추정)을 갖고는 있지만, 이는 압도적인 핵무기 강국인 미국에 견주면 한참 미약한 수준이다.

박근혜는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을 상대로 20년이 넘도록 제재와 압박을 가해 온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근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외면한 발언이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미국은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하려고 북한 ‘위협’을 이용해 왔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 아닌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사드 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이번에도 북한 ‘위협’론이 미국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이 여러 해 전부터 바란 일이었지만, 한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사드 배치가

공론화되는 것은 되도록 미뤄 왔다. 박근혜 정부도 최근까지 “3노(3NO: 사드 배치에 관한 요청 · 협의 · 결정 없음)”를 공식 입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1~2월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미국의 의사가 관철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됐다. 그래서 핵실험 직후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에서 사드 배치를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 한 달도 안 돼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이 됐다.

일본도 중국을 겨냥한 군사 행동과 군사대국화를 정당화하는 데 북한의 핵실험 · 로켓 발사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일본 총리 아베는 안보위기를 내세워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베 정부는 미사일 방어에 쓰이는 스탠다드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현행 4척에서 8척으로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북한 ‘위협’을 자위대 전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미사일방어체제 편입 반대한다

1990년대부터 미국의 역대 정부들은 북한 · 이란 등 “불량 국가”의 위협을 미사일방어(MD)체제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MD는 궁극으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 제국주의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 · 러시아 등이 미국의 지배력 행사를 방해할까 봐 염려해 왔다. 그래서 미국 군사전략가들은 경쟁국들의 미사일 공격을 미국이 방어할 수 있다면 경쟁국들의 도전을 제압하는 게 더 쉬워질 것이라고 믿게 됐다. 미국의 재래식 전력과 핵공격 능력은 여전히 경쟁국들보다 훨씬 더 앞서있으니가 말이다.(물론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가능한지는 별개 문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지역 MD를 구축하는 것도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MD는 미국의 동맹 확대에도 도움이 됐다. 유럽 MD의 구축은 나토(NATO)를 동유럽으로 확대하는 동진 정책과 함께 진행됐는데, 동아시아 MD도 마찬가지다. 2013년 6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내놓은 “아시아 · 태평양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통합된 미사일방어망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제도화된 집단안보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 한 · 미 · 일 동맹 등 중국을 포위하는 다자 동맹을 강화하는 데 미



2월 1일에 열린 사드 한국 배치 중단 긴급 기자회견.

사일방어체제가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사드(THAAD)는 바로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의 핵심 무기 체계다. 사드에 포함된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3천 킬로미터에 이르러,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미국이 중국 북동부나 중부 지역의 군사 활동을 탐지 ·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해 미국이 중국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확률도 높여 준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을 타격하는 최전방 발진기지 구실을 할 것이다. 사드 배치로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직간접으로 강화된다면, 미국의 대중국 군사 개입력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된다는 것도 의미한다. 2012년 한국 국방부는 엑스밴드 레이더 설치를 미국 MD의 편입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 안에 한미 양국은 양국의 MD 지휘체계를 연결할 예정이다. 결국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과 한 · 미 · 일 동맹 강화에 더한층 협력하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을 노린 미국의 갑툭튀’라고 반발하며, 그것이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해 온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군비경쟁 격화 반대

사드의 한국 배치가 가시화하자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모두 자국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사드 배치에 항의했다. 러시아도 유럽 MD에 이어 동아시아 MD로 동서로 압박받는 데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이처럼, 사드의 한국 배치는 제국주의간 경쟁을 더 악화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공산이 크다.

중국은 최근 로켓군을 신설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중국은 미국 MD를 뚫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고 미사일 보유량을 대폭 늘릴 것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군비 경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미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의 나토가 입국들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쓸 정도로 군비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열강의 전략 무기 경쟁이 첨예해지면, 군비 증강 추세는 악화할 것이다.

키리졸브

지금 한반도는 첨단무기의 전시장이 돼 가고 있다. 비단 사드만이 아니다. 미국은 자신의 강력한 무기들을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데 이어, 패트리엇 포대도 한국에 추가 투입했다.

2월에는 핵추진 잠수함과 F-22 전투기 4대를 보냈고, 3월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무기들을 잇달아 한반도에 투입하려 한다. 그리고 키리졸브 · 독수리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 · 미 · 일 동맹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한일 군사 협력도 추진될 것이다. 2월 7일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이 필요하다고 한국 국방장관에게 말하는 등 일본은 한일 군사 협력의 진전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공산이 크다.

이런 조처들은 모두 북한과 중국 등을 자극하고 긴장케 할 일들이다. 중국과 북한 등이 이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며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공공연히 적대하고 갈등을 빚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이 갈등들은 당분간 더 악화할 듯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한반도가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상호 경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보여 준다.

위험 증대에 일조하는 박근혜 정부

지난 3년간 박근혜는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 것을 자신의 외교 치적의 하나로 내세웠다. 특히, 지난해 9월 박근혜는 미국 동맹국의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 한다. 이 때문에 박근혜의 외교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 박근혜 정부는 전통적인 한미 동맹 강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다.

대북 정책에서도 박근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박근혜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을 의식한 측면이 컸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 등 현금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도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대북 송금액 제한 등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호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정당화하려고 통일부 장관 홍용표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이 핵무기·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고 발표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곧 홍용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실토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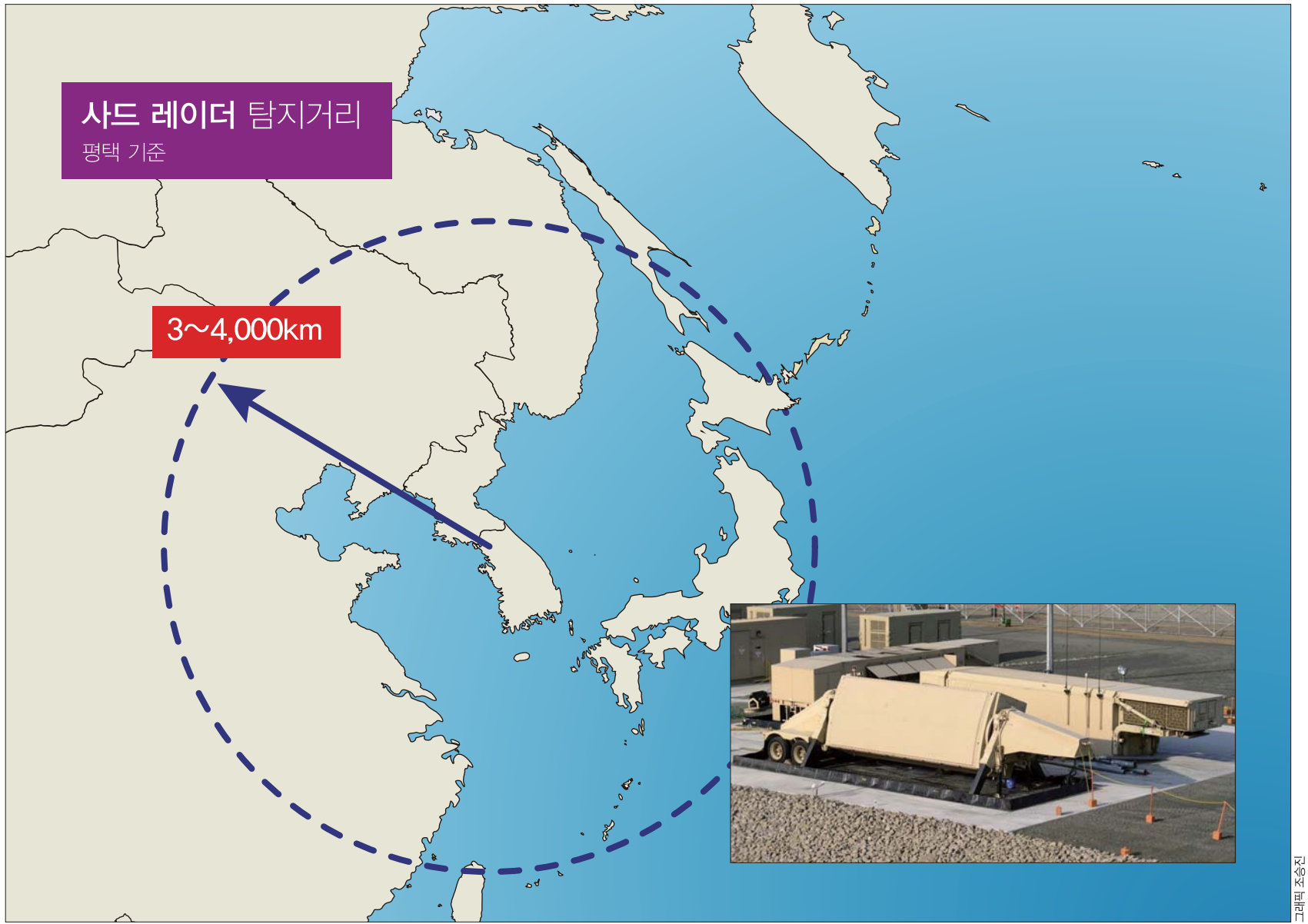
개성공단마저 중단되자, 박근혜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과 로켓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북한 정권 교체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 교체가 외부에 의해 가능한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주장들이 정부 안팎에서 확산되는 것은 박근혜의 대북 강경책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군비도 증강해 왔다.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조사국의 연례 무기거래 보고서는 2014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로켓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군비 증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미국이 군비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는 데다가, 한국 지배자들도 군사력 증강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선일보>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등은 핵무장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정국을 틈타 숨겨왔던 핵무장 야욕을 드러낸 것인데, 한국 지배자들은 핵무장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고자 애쓸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는 사드 배치에 협력하는 등 한미 동맹 강화에 애쓰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대북 강경책과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의 이런 행보는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이 커지는 데 일조할 것이다.



중국의 주요 지역을 탐지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 사드가 대중국용이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의 설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북한 핵무기·로켓은 남한 노동운동에 도움이 되는가?

미국에 이용될 뿐, 반자본주의 운동에는 방해

지난 1월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핵 실험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사반세기의 경험을 보면, 북한의 핵과 로켓 개발은 조선(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미국이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유용한 명분이 됐을 뿐이다. 북한을 핑계로 주변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거나 증강해, 악순환이 반복됐다.

세계경제의 불균등성 때문에 북한

같은 중간 규모 국가가 미국 같은 초강대국에 맞서 자체의 군사력을 증대해 자위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국내 가용 자원의 막대한 부분을 군사 부문에 쏟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모순도 커지고 그만큼 북한 노동계급은 착취와 빈곤 증대 등 엄청난 희생을 강요받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여러 기 보유했다 한들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제재와 압박만 더 거세질 뿐이다.

북한이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라면,

그 국가와 지도자들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맞선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저항을 고무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것만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가장 확실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로켓 개발은 진정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의 저항을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한국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한·미·일 동맹,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과거 냉전 때도 소련과 중국의 핵

무장이 서방의 운동을 분열시키거나 혼란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 예컨대 1950~60년대 일본에서 모든 핵실험에 반대하는 반핵 운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의 핵실험을 놓고 운동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져 결국 일본 반핵 운동은 분열했다. 영국 좌파의 분열도 비슷한 영향을 받았다(공산당과 신좌파 사이에, 공산당 내부에).

핵무기 개발을 위해 애쓰는 북한 관료는 옛 소련·중국의 통치자들처럼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매우 동떨어진 사회집단일 뿐이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

2월 15일 한반도평화포럼 이종석 공동대표는 “한반도의 적대적 불신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자회담 같은 대화가 지속될 때는 핵실험 같은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진보 단체들도 당사국들이 대화에 나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한반도 불안정 상황의 대안으로 생각한다.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국가들이 공공연히 적대하는 것보다는 대화 국면이 노동계급에 더 이로운 국면이 전개되게 해 줄 것임은 맞다.

그러나 역내 제국주의간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국가 간 대화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계속 북한을 ‘악마화’할 것이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핵무기를 십사리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대화 국면이 조성됐다가도, 미국의 합의 불이행이나 파기로 파탄나기 일쑤였다.

고故 리영희 선생이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 미국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는데, 오늘날에도 귀 답아야 할 지적이다. “미국이 조약을 단 한 번도 지킨 사례가 없으므로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단서를 잡아야 한다. … 북경회담 합의문이라는 종이 조각을 토대로 해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은 박근혜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며, 사드 배치도 지지하지 않았다. 분명, 더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균형 외교를 주장하며 남북 화해 협력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한반도 불안정의 핵심 원인인 제국주의에 전혀 도전하지 않고 온순하게 타협함으로써 번번이 근본적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곤 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도전하지 않는 더민주당 같은 포퓰리스트 부르주아 세력은 국가들의 침입한 각축전 속에 화해 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가 없다.

더민주당이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 태세 강화와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자본주의 수호를 공언하는 정당의 한계를 보여준 또 다른 사례일 것이다.(이 결의안에 심상정 등 정외당 의원들도 찬성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동아시아와 한반도 불안정의 근본적 대안은 노동계급의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에 있다.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동역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제국주의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려면 자본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국제 노동계급은 혁명적 운동으로 세계 자본주의를 뒤흔들고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낸 역사적 경험이 있다. 제1차세계대전 당시,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노동자 국가가 수립되면서 동부 전선의 전투가 종식됐다. 그리고 1918년 독일의 노동자 혁명으로 마침내 서부 전선의 전투도 끝날 수 있었다. 오늘날 동아시아 상황이 1백 년 전 유럽 정세와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우리는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 관련기사 13편)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미국 제국주의와 박근혜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면서, 노동계급의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북종’하라는 박근혜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김하영

박근혜는 오늘(2월 16일) 오전 국회 연설에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안 된다며 대북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전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대북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선의가 기존 방식이었던 양하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박근혜가 연설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연설에서 시간을 들여 죽 늘어놓은 대북 지원, 공동사업, 교류협력, 당국간 회담 등을 지난 3년간 남북 관계의 줄기로 기억하는 한국인은 극 우박에 었을 것이다. 그런 일들은 간헐적이고 예외적으로만 이뤄졌다. 국제적 대북제재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등으로 교류협력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됐을 뿐이다.

박근혜의 거짓말은 북한 핵과 로켓을 한반도 위협의 “원인”(박근혜 자신의 표현)으로 규정하기 위한 뻔한 수작이다. 자신의 정부 정책이 낳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에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뻔뻔스런 책임 회피 논리인 것이다. ‘우리가 잘 대해 줬는데도 김정은은 세계 평화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만 돌아봐도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북한 ‘위협’을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뒤이은 로켓 실험으로 실전배치 위협이 높아졌다고 (과장스레) 우려한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남한의 대응을 보면 왜 그 위협이 해소되지 못하고 4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남한은 즉시 사상 최강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끌었고, 그다음 달에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 군사훈련을 한미 합동으로 실시했다. 핵공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북한이 중국과 입장을 조율한 뒤 미국에 핵 협상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팜에 사드를 배치하고, 한국을 미국 주도의 MD(미사일방어) 체제에 참여시키는 데 더 공을 들였다.

그러면서, ‘대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는 식이었다. 이른바 ‘선(先)핵포기, 후(後)회담’ 입장이었다. 그러니 북미 간에 ‘접촉’을 넘어서는 수준의 대화가 열리기는 어려웠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2014년부터 미국은 북한을 다시 ‘불량국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한미 양국은 선제공격의 성격이 강화된 핵·미사일 대응전략(맞춤형 억제전략)을 추진했다.

정책 전환이 아닌 정책 강화

이처럼 지난 몇 년간의 대북 정책을 대강만 돌아봐도, 박근혜가 오늘 연설에서 제시한 방향은 이미 **실패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폭주 정치 동아시아 긴장을 증대시킬 대북 적대 강화, 사드 배치, 군비 증강에 반대해야 한다.

을 알 수 있다. 그 정책은 북한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경제제재와 한미 군사력 강화의 결합이다. 박근혜는 실패한 ‘기존’ 정책이 마치 협력과 선의에 기초한 것처럼 연설에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새’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협력을 얻어내려 했었지만, 그가 발표한 정책 방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와 기시감이 들 정도로 비슷하다.

물론 강도의 강화는 명백하다. 북한의 핵과 로켓 실험 때마다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가 추진됐다. 이번에는 남아 있는 거의 마지막 교류협력 카드인 개성공단마저 폐쇄했다. 한반도에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물려들고 있다. 지난 1월 장거리 폭격기 B-52가 남한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데 이어, 며칠 전 패트리엇 포대가 오산에 배치됐고, 이번 주에는 핵잠수함(노스캐롤라이나호)과 F-22 스텔스 전투기 4대가 들어온다.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 다음달에는 핵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 전단까지 한반도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제 한미 양국이 드러내 놓고 북한 핵 시설 선제공격 위협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제거가 목적인 ‘참수작전’(“참수라니!” 훈련까지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강도가 강화됐다고 효과 개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북 경제제재만 놓고 봐도 그렇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란에 혹독한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핵 협상에 나서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역을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중국의 제재 동참 없이는 국제적 대북 제재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은 제재에 따라 북한의 상황 악화가 국경이나 동북3성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

강도 강화의 측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MD(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가 급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

이다.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했다. 한국 정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쉬쉬했던 것에 비춰보면 실제로 급진전이 아닐 수 없다.

사드 배치는 미국이 오랫동안 한국에 요구해 온 것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명분으로 숙원을 풀었다고 할 만한 일이다.

사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이런 일을 거듭 봐 왔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은 그 사건을 명분으로 주일 미 공군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시키려던 하토야마 일본 정부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그리고 연평도 사건 이후 미국은 이를 이용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앞바다에 항공모함을 들여놓았다.

요컨대 미국은 북한 핵과 로켓 실험이나 국지적 충돌 같은 남북 긴장을 (북한 ‘위협’이라고) 이용해 동아시아에서 동맹과 군사력 강화 같은 전략적 이익을 추구해 왔다. 새롭게 떠오른 지역 강자인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었다. 그래서 날카로운 분석가들은 미국이 한반도 긴장의 지속을 자국의 이익으로 여기는 게 아닌지 의문을 품어 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명분으로 한 사드 배치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 많은 분석가가 아니어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미국이 MD 구축을 위해 북한의 위협을 이용해 왔다’고 폭로했을 때 그것은 다른 폭로들과 달리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라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처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 긴장 증대의 진정한 “원인”과 성격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경쟁이 가열되는 속에서도 결코 ‘아시아 회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고, 지난해 몇 가지 점에서 진전을 이뤘다. 미일 전략동맹 가속화, 환태평양파트너십(TPP) 협상 마무리,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그것이다. 미국은 최근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 상황에서 자신감을 얻은 듯이 말하고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이뤄지면 미국으로서는 또 하나의 쾌거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반발을 부르고, 동아시아 긴장을 더욱 증대시킬 게 뻔하다.

한·미·일 관계 강화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한국이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므로 대응을 “선도”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얼핏 보면 한국의 자주성을

강조한 듯하지만, 사실 이것도 미국에 의해 부여된 각국의 책임 강화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지난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미국은 동맹과 우방에 대한 안보공약을 지키겠지만 지역 이슈는 물론 글로벌 도전과제에도 각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정책은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하락이라는 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동맹국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동맹국의 안보 취약점을 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대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책임과 비용을 분담시키려는 것이다.

이 정책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게 바라는 바는, 한일 관계를 복원해 한·미·일 관계 강화에 이바지하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미국 주도 MD체제 참여와 사드 배치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됐듯이 동아시아 긴장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말할 나위 없이 첨단 무기 구입과 국방비 증액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또, 위안부 협상 같은 한일 역사문제가 한·미·일 관계 강화 추진 속에서 거듭 불거질 수 있다.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미사일 방어 태세 향상”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취해야 할 제반 조치라고 강변한 셈이다. 그럼으로써 사드 배치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광범한 반대를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억누르려 한다.

이참에 착취 강화도!

박근혜는 북한 ‘위협’을 빌미로 사드 반대를 제압하려 할 뿐 아니라, 해묵은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 ‘위협’과 관계 없이 추진해 왔던 서비스발 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을 안보를 이유로 통과시키라고 촉구한 것이다.

▶ 5면으로 이어짐



한반도에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물려들고 있다. F-22 스텔스 전투기.

공무원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에 맞서

균등분배 위한 중앙집중적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위한 양대 지침 발표 직후,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1월 26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수당·보수 규정 개정과 퇴출제 도입을 위한 성과평가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된다. 인사혁신처 권한도 강화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훨씬 강화하려 한다. 게다가 '애국심'을 공직 가치에 포함해 국가를 위해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이미 각종 시행령 등을 개악해 이런 일들을 추진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년간 4개 법률을 6회, 16개 대통령령을 23회 개정하여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성과급 확대·강화가 해악적인 이유

첫째, 직무·성과급 중심 개편은 임금 삭감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관철한 데 이어 이제 공무원 임금체계를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대표적인 연공급제인 공무원 임금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려 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수당 삭감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5급 성과연봉제 도입 직전에 초과근무수당을 없앴다.

둘째,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가 관철되면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도 손쉬워진다. 정부는 성과평가에서 해마다 10퍼센트가 최하위 등급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언제든 필요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이미 지난해 말 시행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퇴출제로 두 명이 사표를 냈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추진된 퇴출제를 이제 중앙부처 주도로 면밀하게 도입하려는 것이다.

셋째, 성과 경쟁은 전반적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진다. 정부 조처대로 하면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성과급 격차는 월 19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3배 확대되고 같은 호봉인 공무원의 월 보수 격차가 최고 1백만 원 가까이 된다. 임금을 더 받기 위한 경쟁이 생기면 결국



성과급제, 개악의 신호탄 정부의 집중적인 공격에 맞서 우리도 중앙집중적으로 싸워야 한다.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동료 간 임금 경쟁은 사용자들에 맞선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치기 쉽다.

넷째, 공공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업무를 개인별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성과평가는 결국 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자에 대한 줄서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결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무려 98퍼센트에 달했다. 많은 공무원들이 “권력형 줄서기 강화와 상급자의 권력 전횡”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 성과주의는 공공서비스의 수익성 중시를 강요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정부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을 먼저 공격해 성과주의 임금 체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려 한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악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균등분배

현 시점에서 정부 공격의 핵심은 성과급 차등분배를 관철하는 것이다. 지난해 60퍼센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급을 균등분배해 왔다. 그러자 정부는 성과급 균등분배를 주도할 경우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강화했다. 균등분배를 어렵게 하려고 성과급 월별 지급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다. 최근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 성과급 반납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답한 조합원이 무려 97퍼센트에 이른다. 조합원들은 성과급을 공무원노조에 중앙반납하길 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중앙반납한 성과급을 어떻게 할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성과급 중앙반납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중앙반납 후 균등분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성과급 차등분배가 관철되면 노동자들이 성과에 따른 임금 차별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정부가 전체 임금에서 성과급 비중을 더 확대하기도 쉬워질 것이다. 또 성과주의 강화에 맞선 첫 전투에서 잘 싸워야 성과급 확대와 퇴출제 저지 투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균등분배가 무너진 지부는 이번 기회에 되살려야 한다.

둘째, 성과급 균등분배는 과거 성과급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다. 2000년대 초 공무원노조는 성과급 전면 도입에 맞서 지방의회 예산 편성 저지, 성과급 반납 등으로 맞섰다. 그 투쟁의 여파로 정부는 2004년부터 성과급 지급 관련해 직장협의회와 상의하도록 내부 지침을 시행해야만 했다. 이 지침이 지금까지 균등분배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성과급 제도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균등분배를 공격해 차등분배를 실질화하려 한다. 따라서 이번 투쟁은 균등분배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집중적인 공격에 맞서 우리도 중앙집중적으로 싸워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은 중앙정부가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이에 맞선 대응이 개별 지부에 맡겨진다면 제대로 싸울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차등분배 방식을 수용하고 지부별로 구청 측과 협의해 '조용히' 균등분배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실용주의적으로 각자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의 대응은 각 지부의 투쟁력과 조직력이 불균등한 상황에서 사실상 싸우지 말자는 것이다.

넷째, 일부 활동가들은 균등분배가 아니라 성과급 폐지를 위해 아예 '성과급을 받지 말자'고 주장한다. 성과급 자체를 폐지하기 바라는 심정은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 '성과급 거부'는 효과적인 전술이 아니다. 7급 기준으로 평균 3백만 원의 '임금'(성과상여금)을 선뜻 포기할 노동자들은 많지 않다. 게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균등분배로 사실상 성과급을 '임금'처럼 받아왔는데,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과 같다. 지금은 정부의 차등지급 시도에 맞서 균등분배를 방어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성과급 '일반수당화'를 요구하며 성과급 폐지 투쟁으로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성과급 균등분배 조직자에 대한 징계 위협에 맞서 분명한 투쟁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그 속에서 2월 27일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3월 성과급 저지 투쟁의 중요한 디딤돌로 삼자.

▶ 4면에서 이어짐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북풍 의혹 같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비난했지만, 북한 '위협'을 이용해 정부 정책 반대를 제압하려는 것이 '북풍'이 아니면 무엇인가? 안보 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는 적어도 총선 국면까지 줄줄이 이어질 게 뻔하다.

노동자 운동은 박근혜의 대북 적대강화, 사드 배치, 군비 증강 등을 반대해야 할 뿐 아니라 안보를 빌미로 한

노동개악 강행 기도에도 반대해야 한다. 박근혜가 외부의 적을 부각하며 내부의 단결을 촉구하는 것에 맞서, 박근혜가 경계했던 바대로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려야” 한다. 즉, 박근혜의 대북 적대 강화에 반대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적 아시아 정책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다른 동아시아 나라 정부들의 정책에 기대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가령 중국은 경제 성장과 함

께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선 안 되지만) 미국과 경쟁하는 제국주의 국가다. 중국의 세력 확장은 미국이 중국의 주변국 보호를 내세워 동맹을 강화하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또, 중국에 기대를 품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부와 주요 정당들이 중국에 한쪽 다리를 걸쳐 놓기를 선호한다는 점에서도 위험하다. 중국에 기대기가 노동운동이 자국 지배계급의 일부와 동맹하는 것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거나 미국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맞서는 것도 결코 아니다. 북한 당국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으로 미국과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을 추구해 왔다. 이런 정책은 지난 18년 동안 한반도 민중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을 내세우고 있지만, 계속되는 인민들

의 생활고(식량 부족과 물가 인상 등)는 경제와 핵무기 병진 노선의 모순을 보여 준다. 중국은 북한의 비법 언덕이지만,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로 광산물의 대중국 수출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노동자 운동이 마르크스와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조한 국제주의 원칙(국제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을 지킬 때만 일관된 반제국주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2월 18일 ‘(가칭)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 정권 심판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총선공투본)가 출범한다. 총선공투본에는 “민주노총 요구,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에 동의하고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적 공세에 대한 공동 투쟁 조직화에 동의하는 정당, 정치조직, 사회운동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정당·노동단체들을 비롯해 20곳이 넘는 주요 노동자·민중 운동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총선공투본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으로, “민중 주도로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세력 심판”이 목표다.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 운동 진영이 총선 공동 투쟁을 하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 조직인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맞서 각개 대응하지 말고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므로, 총선공투본의 취지는 좋은 것이다.

또, 총선공투본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의 결실을 총선에 적용해 보자는 구상이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는 아쉽게도 파업과 연결되지 못했지만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노동자들이 주도한 최대 규모의 정치적 항의 운동이었다. 그 민중총궐기를 함께 건설한 노동자·민중 운동 단체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주요 계획도 “대중 투쟁과 후보 전술을 결합”하는 것이다. 즉, 2월 27일 4차 민중총궐기와 3월 26일 (가칭) 총선 대응 총궐기 투쟁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민중 단일 후보를 통한 선거 돌파다. 투쟁과 선거의 결합은 전통적으로 좌파 개혁주의적 착상이라 할 수 있는데, 대중 동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온건한 선거중심주의에



총선공투본은 총궐기 투쟁과 민중 단일 후보 운동을 결합해 총선공동투쟁을 함께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1차민중총궐기 투쟁 모습.

비해 지지할 만하다.

민중 단일 후보는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와 총선공투본 공약에 동의하는 총선공투본 참여 단체 소속 후보로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부르주아 야당 후보는 민중 단일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총선공투본이 중앙 수준에서 범야권연대를 제안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정의당·민중정치연합·노동당 등 노동자 운동 내 복수의 정당들이 존재하는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후보 조정을 통해 민중 단일 후보를 선정하자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다. 같은 선거구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지 못해 서로 경쟁하다가 부패하고 우익적인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환멸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창원성산, 울산북구, 울산동구를 ‘전략 지역구’로 선정했다. 그런데 이 지역구들은 모두 복수의 진보·좌파 후보들이 출마한다. 창원성산에서는 노회찬(정의당)과 손석형(무소속) 후보가, 울산북구에서는 윤종오(무소속)와 조승수(정의당) 후보가, 울산동구에서는 이갑용(노동당)과 김중훈(무소속)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노동자 밀집 지구인 이곳들에서 진보·좌파 후보들

이 새누리당을 꺾고 선거 돌파를 해 준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사기도 오를 것이다. 민중 단일 후보 구상은 이런 노동자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는 방안이다. (창원성산은 두 후보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이다.)

야권연대

그런데 총선공투본의 민중 단일 후보 전술 논의는 야권연대 문제가 제기되면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총선공투본이 선정한 민중 단일 후보가 더민주당 같은 부르주아 야당 후보와 추가 단

일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를테면 창원이나 울산에서 민중 단일 후보가 새누리당과 일대일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더민주당 후보 등과 단일화를 할 수 있는가, 민중 단일 후보가 더민주당 후보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경우를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총선공투본 소속 단체들 사이에 야권연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 가령 통합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야권의 분열로 집권당의 압승과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단기적 후보 연대가 아닌 향후 공동정부 구성까지 염두에 둔 제안이다. 그래서 통합 정의당에게 야권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반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야권연대를 해서는 안 되고 민중 단일 후보는 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좌파들이 있다. 이들은 사실상 야권연대를 지향하는 세력과는 총선공투본을 함께할 수 없다는 태도다.

반면, 노동자연대는 전략적이고 무비판적인 야권연대를 반대하지만, 불가피한 타협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 타협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공동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특정 선거구(들)에 한정해, 후보 단일화 수준의 제휴를 하면서, 정치적 비판을 삼가지 말아야 한다.

야권연대를 둘러싼 이견이 사소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민중 운동 진영이 공동 대응하자는 총선공투본의 목표가 무색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김인식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농촌 선거구가 너무 작아서 도시 인구가 상대적으로 덜 대표되므로 현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현재 위헌 판결 때까지 유지된 것은 지역 몰표에 크게 의존해 온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현행 제도를 선호해 온 탓이다. 한국은 ‘계급 투표’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비중도 매우 작다. 2002년부터 부분 도입된 정당 비례대표제는 부족하나마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에 도움이 돼 왔다. 2004년 총선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10명 중 8명이, 2012년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 13명 중 6명이 비례대표였다.(그 명단이 분열의 씨앗이 됐지만 말이다.)

즉, 현행 선거제도는 도시 노동계급의 정치적 의사를 ‘과소대표’(그 실제 비중보다 적게 대표)한다. 노동계급에게 더 비민주적인 것이다. 게다가 여야는 비례대표제도 약화시키려 한다. 현재가 정한 선거구 협상 기한을 어기면서도 여야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



4차 통합으로 정의당의 노동운동 기반은 더 강화됐다. 그에 걸맞는 의원을 배출해야 한다.

는 것에는 미리 합의를 해 놓은 상태다.

투쟁 스피커

이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 ‘통합 정의당’은 복수의 비례대표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의 폭주와 옛 민주당 세력의 지리멸렬, 노동자 투쟁의 부분적 회복 조직 속에서 정의당이 세를 늘렸다. 지난해 말에는 노동·정

치·연대, 진보결집더하기(+), 국민모임 등과 통합도 했다.

물론 옛 진보당 계열들의 지역기반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총선 대응 문제를 놓고 서로 나뉘는 듯하다. 일부는 울산 등지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데 반해, 일부는 민중정치연합(가)을 새로 만들었다. 민중정치연합이 정당비례 득표에서 옛 지지율을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봤을 때, 최소 3석이라도 당선 가능한 비례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의당인 셈이다. 이런 조건에서 당선 가능 범위의 정의당 비례후보로 노동운동을 더 좌파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노동운동가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의 스피커 구실을 할 인사가 좋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보다는 노동자 투쟁을 옹호하며 현장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좌파 정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 운동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선적이거나 자동은 아니겠지만) 선진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계발되고 노동운동이 더 정치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전략 공천

아쉽게도 정의당 내 기대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지난 전국위원회에서는 지도부가 전략공천 필요성을 제기한 듯하다. 국민의당이라는 경쟁자가 하

나 더 생기고, 비례의원 정수가 줄면서 정의당의 비례득표 목표에 장애물이 생긴 상황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전략 후보로서 앞서 언급된 그런 구실을 할 수 있는 노동계 활동가를 추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안팎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전략 후보가 <디펜스21+> 김종대 전 편집장이라는 것이다. 김종대 씨는 정의당 예비내각의 국방부 예비장관으로 영입됐다. 김 예비장관은 박근혜 정부를 ‘안보 무능’ 논리로 비판한다. 안보 무능/유능 논리는 미국의 민주당 우파와 공화당이 버니 샌더스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애국주의 프레임을 지배계급 정치인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직결된다.

이는 사실상 국가 강화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노동자 운동에 하등 도움될 것이 없다. 군비 대신 평화와 복지 투자를 늘리라는 요구에도 해롭다.

이런 지나치게 온건한 인사보다는 좌파적 노동운동 출신자가 정의당을 대표하는 의원이 돼야 한다.

김문성

기아차 노조의 지방노동위원회 7명 전원 승소 부당징계 철회 투쟁의 통쾌한 승리!

지난해 9월 기아차 사측은,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이하 8+8교대제) 관련 양보교섭에 반대해 교섭장 봉쇄 투쟁을 한 조합원 9명을 고소고발 했다. 출근정지 2개월에서 10일이라는 부당징계도 내렸다. 교섭장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한 항의 행동과 집회를 이유로 사측이 징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의 양보교섭 항의 투쟁은 다른 때보다 격렬했다. 노조 집행부가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거슬러 단협 개악, 휴일 축소, 노동강도 강화를 포함한 양보교섭을 밀어붙였기 때문이었다.

과거, 주야 10시간 교대근무제에서 8+9시간 근무제로 전환할 때도 '임금보전'을 이유로 노동강도가 매우 강화됐다. 그런 경험 때문에 조립, 도장, 차체 등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번에 특히 거세게 반발했다.

집행부 양보교섭안 폐기 서명에 화성공장 조합원 4천여 명이 며칠 만에 동참했다. 이런 반발 때문에 3분의 1이 넘는 대의원 1백85명이 대의원대회 개최 요구를 하며 서명했지만 집행부는 이조차 무시한 채 교섭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교섭장에서 몸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특히 6월 3일 노동자측 교섭단이 교섭장에 입장한 이후 사측은 구사대 3백여 명을 동원해 활동가 50여 명을



노동조합 지도부라도 아래로부터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역행하면 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4시간 동안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 집행부의 양보안보다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 교섭은 5분 만에 결렬됐고 이후 교섭은 열리지 않았다.

교섭이 결렬되자 노조 집행부는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봉쇄 투쟁을 한 활동가들을 노보를 통해 비난했다. 하지만 7월에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양보안은 폐기됐고 지부장은 '3무 원칙'(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 유연화 없는 주간

연속2교대제)에 입각해 8+8교대제 교섭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또한 교섭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측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교섭장 봉쇄 투쟁의 정당성을 대의원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인

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사측이 9월 초 고소고발과 징계를 단행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단협 37조 3항에 의거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사측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노조 집행부와 현장 활동가들의 강력한 항의로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나 무산되자 일방적으로 징계를 통보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부당 징계에 맞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과 15일 전원 승소했다. 사측은 이번 항의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다' 하고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쾌한 승리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어선 안 된다. 사측이 단체협약과 관행까지 무시하며 징계를 단행한 것은 조합원들의 불만과 활동가들의 항의를 억누르기 위함이다. 이런 항의 행동이 없으면 사측이 노조 지도부에게 양보를 '설득'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사측의 이런 행위에 썩기를 막기 위해서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현장 탄압 문제를 공론화하고 단협 위반 책임자 처벌과 고소고발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해야 한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조합원, 금속노조 대의원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정의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정권교체 연합을 구성"(1월 20일 심상정 대표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해 총선에 임하자고 주장한다. '전략적 야권연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까닭은 "야권의 분열로 집권당의 압승과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 후보 조정만을 위한 연대는 ... [단순한 이합집산으로만 보여] ...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2014년 지방선거 성공 이후 각종 재·보선에서 야권의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 2014년 7·30 재보선이 대표 사례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근소하게 이긴 데다가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치러진 선거인데도 야권이 대참패를 당했다.

이것이 대중이 전반적으로 우경화했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입지가 탄탄하다는 표시였을까? 그 뒤 전개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측근 부패, 세월호 시형령, 노동개악 반대 투쟁, 여권 내분 등으로 박근혜 정부는 거듭 (지지를 추락 포함)한 정치 위기를 겪었다.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부정적 답변이 절반을 넘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무지막지한 공세를 퍼면서도 "노동개혁" 문제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중심에 놓으면 오히려 노동운동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에 1년 넘게 묶여 있다.

오히려 최근의 선거 결과는 박근혜에 맞설 정치적 수단으로서 현재의 제1야당을 사람들이 영 못마땅해 하는 현실을 보여 줬다.

민주당 세력은 박근혜에 맞서는 모양새를 취해 선거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보려고 했다가도 박근혜가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해칠 텐가' 하고 협박하면 금세 꼬리 내리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는 민주당이 비주류일지라도(이 때문에 포퓰리즘적 언사를 빈번히 할 하기도 하지만) 지배계급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자체는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 앞에서(아무리 미워도) 박근혜 정부와 계급적 성격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과 연립정부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스탈린주의는 인민전선 전략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는 노골적인 위로부터의 개혁 노선 때문에 이런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곤 한다.

그러나 노골적 자본주의 정당과의 전략적 연대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킨다. 계급을 초월한 동맹을 유지하려면 노동운동은 자본가들을 불편하게 만들 계급투쟁 방식의 저항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정치 활동의 주 무대가 국회와 부르주아 언론 노출로 옮겨지면 이른바 '국정 운영' 경험, 언론을 다루는 수단과 노하우를 훨씬 많이 가진 기성 정치인들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갈 공산이 커진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힘을 사용해 투쟁하며 계급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해가 된다.

배신적 타협과 불가피한 타협의 구분

심상정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처럼 고충을 털어냈다. "진보정치는 선거 때만 되면 언제나 두 가지 상반된 요구에 직면해 왔습니다. 하나는 ... 진보정치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야권연대 요구를 "국민의 명령"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전략적 야권연대를 정당화하려는 용어법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선거구제 아래서 지역구 당선이 유력한 진보 후보들조차 민주당 등과 후보 단일화 압력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무시할 순 없다. 노동계 후보 간에도 단일화가 쟁점이 된다. 한쪽 후보가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경우다.

후자의 이유로 분열했던 창원 성산(2012년 총선), 울산 동구(2014년 구청장 선거) 모두 각각 낙선한 두 진보 후보의 표를 더하면 당선한 새누리당보다 많았다. 이런 경우 양측의 분열이 노동자들의 사기와 정치의식 고양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다.

그 점에서 야권연대를 원칙으로 거부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경직된 태도일 것이다. 우리는 전술에서 불가피한 타협과 불필요한 타협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다음과 같은 전술적 야권연대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1) 어쩔 수 없는 경우에, (2) 공동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고, (3) 그저 특정 선거구(들)에 한정해, (4) 후보 단일화 수준의 제후를 하면서, (5) 정치적 비판을 삼가지 않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사회주의적 전술이다."(노동자연대 성명 2014.11.6)

총선에서 (1)을 부연하면, "각별히 반동적인 우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진보/개혁파로 여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진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단일화 압력이 생길 경우"(같은 글)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창원 성산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지역 진보단체들, 노회찬, 손석형 두 후보가 신속히 합의해 민주노동당 창원 조합원들의 총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울산 북구(윤종오, 조승수)와 동구(김종훈, 이갑용)는 설 연휴 전후로 단일화 절차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중단일후보 선출 후 이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들과 박빙일 때 더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는 남는다.

이 경우, 투쟁의 전진을 위해 불가피한 타협이나, 배신적 타협이냐가 중요한 기준일 것이다. 대중이 단결해서 자력으로 싸우는 과정이 가장 효과적으로 계급의식과 자신감을 고양시키기 때문이다.

김문성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민주주의 분석

차승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장기 불황”이라고 부른 세계경제 위기는 전 세계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정을 낳고 있다. 그 정치 위기로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제도권 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40여 년 동안 우파 정당인 신민당과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이 분점하던 양당 구도가 해체되고,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인 시리자가 집권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당은 완전히 몰락해 버렸다.

그리스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프랑코의 군부독재가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전통적 우파 정당인 국민당과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이 독재했다. 그러나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인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가 급성장하며 스페인에서도 양당 구도가 무너졌다. 2015년 12월 20일 실시된 총선 결과, 어느 정당도 의석을 절반 이상 획득하지 못하고 연립정부 구성도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스페인은 두 달 넘도록 정부도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사회당은 현재 미국 주도의 시리아 폭격에 동참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거듭 연장하며 민주적 권리를 제약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혀 좌파답지도 노동자 정당답지도 못하다.(2012년 대선에서는 정치 양극화의 수혜를 입어 승리해 17년 만에 집권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변방 좌파’ 제러미 코빈이 노동당 당대표로 선출됐다. 코빈이 당대표로 당선되지 불과 넉 달 전에만 해도



그리스 시리자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인족 중단 염원에 힘입어 집권했지만, 지금은 혹독한 인족을 추진하고 있다. 시리자 대표이자 총리인 알렉시스 치프라스(왼쪽)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케(오른쪽).

영국 노동당은 총선에서 참패하는 등 거의 산송장 신세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빈의 당선을 ‘천지개벽’에 비유했다. (이런 정치 위기 속에서 유럽 전역에서 극우와 파시즘도 성장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 상단의 ‘파시즘과 인종차별’란에 실린 기사들을 참고하시요.)

개혁주의의 성장

한국도 이런 흐름에서 비껴서 있지 않다. 여전히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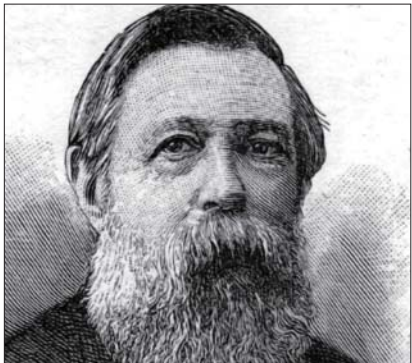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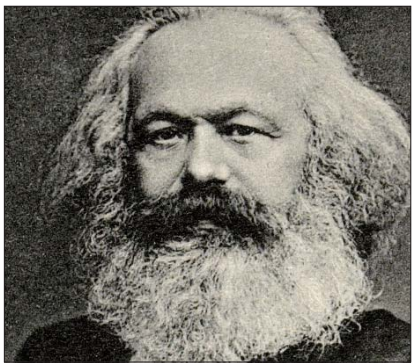
만 말이다. <노동자 연대> 166호에 실린 기사,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에서 지적했듯이, “통합 정의당 같은 정치개혁주의가 소생”하고 있다.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에는 노동자들이 “낙담·사기저하·우울·무력감·두려움”을 내비쳤다면, 2015년에는 약ذب도 있었지만 파업과 대규모 거리 시위 등 노동자 투쟁이 일어나며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덕분이다.

이처럼 개혁주의가 성장하는 것은 투

마르크스와 엥겔스

반(反)자본주의적 투쟁의 시초는 자본주의의 태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봉건제의 굴레에서 벗어났고자 했던 부르주아지(그리고 그 이데올로그들)는 봉건제에 맞서는 투쟁에 다른 사회 집단도 끌어들이야 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부르주아 혁명인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는 추상적인 자유·평등·우애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구호가 부르주아들끼리의 자유·평등·우애를 뜻할 뿐임은 곧 드러났다. 자본주의의 부조리에 항의하는 운동은 바로 프랑스 대혁명 속에서 시작됐다. 예를 들어, 역사상 최초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인 그라쿠스 바비프가 이끈 ‘평등파의 음모’의 활동이 있다. (바비프에 관해서는 웹 드라마 ‘지음, 최일봉 옮김, <사회주의의 두 가지 전통>(노동자 연대 2014), ‘윤길이의 머리맡’을 참고하시요.)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정치 활동을 시작할 무렵은 근대 노동운동이 태동하던 때였다. 마르크스



위 카를 마르크스(1818~1883). 아래 프리드리히 엥겔스(1820~1895)

와 엥겔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별개인 사상으로 받아들여지던 사회주의와 혁명을 결합시켰고, 노동계급을 사

회주의 혁명의 중심 세력으로 봤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개혁주의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1848년에 쓴 <공산당 선언>의 5분의 2를 다른 사회주의 이론을 다루는 데 할애했음을 고려하면 의외하게 보일 수 있다. 심지어 <공산당 선언>에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와 타협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구절도 있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렇게 개혁주의를 배제한 채 세 단계의 전망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은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자신들끼리의 경쟁으로 분열돼 있는 오합지졸 같은 대중을 이룬다.” 그러다가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을 만든다. 마침내 계급 전쟁이 “일어나 공공연한 혁명으로 이어지고 … 혁명에서 부르주아지가 폭력적으로 타도돼 프롤레타리아 지배의 토대가 놓인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공산당 선언>에서

쟁의 성장으로 대중 의식이 좌경화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급진 좌파는 개혁주의의 성장을 환영해야 한다. 물론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환영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1백50여 년의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사회민주주의(좌파적 버전이든 우파적 버전이든)는 노동계급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좌파적인 유형인데도 그리스 시리자가 노동자들의 강력한 인족 중단 염원에 힘입어 집권한 지 채 한 년도 안 돼 더 혹독한 인족을 시행하는 모

습을 보이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한계의 최신 사례일 뿐이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개혁주의가 단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혁주의는 무엇이고 마르크스주의자는 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문제에 있어서, 격변의 시대를 먼저 산 혁명가들의 주장과 실천은 많은 영감과 힌트를 줄 것이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과 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를 갖지 않는다. … 공산주의자는 현재의 계급 투쟁에서,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 운동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실제의 관계들을 일반적 용어로 표현할 뿐이다.”(<공산당 선언>)

이 진술에는 노동계급의 정당은 결국 혁명이라는 목표를 채택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물론 이런 요약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고타 강령 비판> 같은 글에서 개혁주의 사상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개혁주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고, <공산당 선언>에서 개진한 입장을 생애 말까지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1867년 영국에서 속편 남성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이 보장되고 1871년 독일에서 남성들이 대상으로 보통선거권이 실시되면서 개혁주의로의 통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뒤로도 개혁주의를 풍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개혁이나 혁명이나》

노동운동 내 개혁주의로 향하는 흐름을 처음 심각하게 포착해 낸 사람은 독일 사회민주당(SPD) 급진파의 리더 로자 룩셈부르크였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혁명에 헌신한다고 했지만, 중간과 카를 카우츠키의 지도 아래 실천에서는 혁명적이지 않았다. 카우츠키는 <공산당 선언>을 완전히 기계적으로 이해해, 사회주의자는 혁명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의 정당은 혁명적 당이지만 혁명을 일으키는 정당은 아니다. 우리의 목표가 혁명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우리의 적대자들에게 혁명을 막을 힘이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혁명을 창조할 힘이 없음도 우리는 안다. 혁명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위한 길을 닦는 것은 우리의 과업이 아니다.”(<권력으로 가는 길>)

독일 사회민주당에서 득세했던 또 다른 세력은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이끈 수정주의 파였다. 베른슈타인은 혁명에 헌신한다는 말조차 과도하다고 받아 완전히 개혁주의적인 강령을 제시했다. 그는 신용의 확장 덕분에 자본의 순환이 빨라져 자본주의에서 더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통선거권이 확충되고 노동조합이 발



로자 룩셈부르크(1871~1919)

전하면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회주의가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룩셈부르크는 1899년에 쓴 <개혁이나 혁명이나>에서 베른슈타인의 전망을 날날이 파헤쳐 비판했다. 정점은 어떻게 사회 변혁을 이룰 것인가, 즉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선거나 교섭에 기댈 것이냐였다. 룩셈부르크는 두 전략이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력 장악과 사회혁명을 반대하며 그 대신에 개혁 입법을 택하는 사람은 사실 같은 목표를 이루는 더 평온하고 안정적이지만 느린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는 전혀 다른 목표를 지

레닌의 ‘노동계 귀족’ 이론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개혁주의가 차르 왕정의 혹독한 탄압 속에 있는 러시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룩셈부르크의 선구적 연구를 바탕으로 보여 줬다. 그러나 레닌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레닌은 노동계급 일반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줬다. 레닌은 이렇게 주장했다. “진정으로 혁명적인 이론을 따르며, 진정으로 혁명적이고 자발적으로 각성하고 있는 계급에 의존하는 러시아 혁명가들이 마침내, 정말로 마침내! 그들의 막대한 힘을 모두 갖추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때가 왔다.”(<무엇을 할 것인가?>)

혁명가들이 노동계급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혁명가와 노동계급은 동의가 될 수 없다.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혁명가와 노동계급은 구분되지 않는다고 레닌을 비판했다. 혁명가들이 노동계급을 ‘외부로부터 밀어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그들의 비판에 레닌은 이렇게 답했다. “그런 ‘외부로부터 밀어 움직이기’가 너무 많았던 적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너무 없었다 … 혁명에 전념하는 우리는 ‘밀어 움직이기’ 활동을 지금까지 한 것보다 백 곱절은 더 강력하게 펼쳐야 하고 또 그럴 것이다.”

레닌은 그래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민주주의 의식이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



블라디미르 레닌(1870~1924)

했다. 사회민주주의[오늘날의 용어법으로는 혁명적] 의식은 외부에서 노동자들에게 도입돼야 할 것이다. 모든 나라의 역사는 노동계급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노동조합 의식을 발전시킬 뿐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하지만 사회주의 이론은 유산계급의 교육받은 대변자들, 즉 지식인들이 일구어 낸 철학, 역사, 경제 이론들에서 나온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만 보면 레닌은 개혁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가 모두 노동계급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본 듯하다. “노동자 대중 자신이 운동 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독립적 이데올로기는 없다. 오로지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나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냐는 선택이 있을 뿐이다.”

향한다. 그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낡은 질서의 걸모습을 수정한다는 입장을 택한 것이다.”(<개혁이나 혁명이나>)

룩셈부르크가 개혁주의의 본질을 식별해 낸 것은 커다란 성과였지만, 그녀도 마르크스·엥겔스처럼 개혁주의를 노동계급 정치에 침투해 들어오는 외부적 존재로 여겼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이렇게 분석했다. “베른슈타인이 공들여 세운 [독일 사회민주당 내 기회주의적 이론은 우리 당으로 유입된 프티부르주아적 요소들의 우위를 확고히 해 주고 우리당의 정책과 목표를 프티부르주아적으로 바꾸려는 무의식적 노력일 뿐이다. 개혁이나 혁명이나는 문제, 최종 목표와 운동이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의 프티부르주아적 성격이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이라는 문제를 다른 형태로 제기한 것일 뿐이다.”(<개혁이나 혁명이나>)

운동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이 유지되는 한, 그 운동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운동에 조응하는 정치 강령도 혁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적이지 않다면 어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1910년 제2인터내셔널 대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그람시와 트로츠키의 계승

안토니오 그람시와 레온 트로츠키도 ‘노동계 귀족’ 이론을 받아들였다. 그람시는 1926년 발표된 ‘리옹 테제’에서 이탈리아에는 개혁주의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두 가지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프티부르주아지와 농민이 대거 노동계급으로 바뀜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안에서 새 이데올로기 경향이 확산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 노동계 귀족이 형성”되는 것이었다.

트로츠키는 <러시아 혁명사>에서 ‘노동계 귀족’ 이론을 원용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시도였다. 왜냐하면 차르 치하의 러시아에서는 개혁주의를 포함한 반정부 세력이 모두 혹독하게 탄압당했고, 그래서 노동계급 내에 특권층이 서서히 생겨날 기회가 없었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교섭을 담당하는 노동계 관료가 성장할 기회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17년 2월 혁명 뒤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 노동자와 병사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된 소비에트가 설립됐는데, 그 대표자들은 대부분 개혁주의자(멘셰비키당과 사회혁명당)였다. 이처럼 2월 혁명 직후 러시아에서 개혁주의가 특세한 이유를 트로츠키는 이렇게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자본의 관료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 관료들, 즉 새 중간계층 [때문이다.] … 혁명의 성격과 그로부터 생겨난 권력의 성격은 서로



위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 아래 레온 트로츠키(1879~1940)

모순되는데, 이는 혁명적 대중과 … 부르주아지 사이에 놓인 새 프티부르주아지라는 칸막이벽이 가진 모순된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격변이 일어난 와중에도 “노동계 관료들, 즉 새 중간계층”이 불쑥 튀어나와 사태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 9면에서 이어짐

“모순된 의식”

‘노동계 귀족’ 이론은 지배계급과 대중 사이를 중재하는 노동계 관료에 초점을 맞춘다는 강점이 있지만 한계도 있다. 첫째, 이 이론은 노동계 관료와 고임금 노동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를 보면, 고임금 노동자들은 투쟁과 강력한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그런 성과를 쟁취했다. 고임금 노동자들은 대중의 급진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는커녕, 어떤 상황에서는 대중의 급진화를 촉진하기도 했다. 노동자 혁명 물결이 가장 크게 일었던 1917~24년, 비교적 처지가 나았던 숙련 금속노동자들은 거둬 투쟁의 선봉에 섰고, 공산당들이 창립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둘째, ‘노동계 귀족’ 이론은 왜 노동자들이 개혁주의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때로는 지도자들의 배신을 꼭 참는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노조 관료들이 배신하는 것이 받아 들여진다는 말은 아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투쟁을 패배로 이끄는 것에 대한 평조합원들의 분노가 폭발한 사례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일이 많은 것은 개혁주의 사상이 ‘노동계 귀족’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계급 내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1차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역사를 보면, 개혁주의를 제국주의(덕분에 얻은 초과이윤)와 연결시키는 것은 틀렸다. 제3세계에서 일어난 혁명들도 이러저러한 유형의 개혁주의로 빚나갔기 때문이다. 1979년 이란, 1990~9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개혁주의에 관해 여러 핵심 주장을 내놓았다. 룩셈부르크는 개혁주의의 방법과 혁명적 정치의 방법이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하는 것임을 보여 줬다. ‘노동계 귀족’ 이론은 노동계 관료들이 개혁주의를 부추기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런 통찰들을 바탕으로 고전 마르크스주의는 개혁주의의 본질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혁명적 사

회주의자들이 개혁주의에 대응해 채택해야 할 전술을 개발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는다. 개혁주의의 생명력이 질긴 것을 보면 개혁주의는 단지 노동계급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요소가 아니다. 또한 ‘노동계 귀족’ 이론의 가정과 달리 개혁주의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도 광범하게 퍼져 있다. 그러므로 주장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다행히 마르크스주의의 무기고에는 이를 도울 도구가 있다.

지배적 사상과 실제의 현실

개혁주의를 노동계급 외부 세력이나 노동계급 내 부패한 일부 소수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면, 개혁주의는 노동계급 자체 안에서 발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결론지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존재하지만 끊임없이 변하며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요인이 여기에 관여한다. 첫째, 마르크스가 “지배적 사상은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를 이상화된 형태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하고 지적한 것이다. 언론과 교육 등 수많은 설득 수

단을 통해 자본주의가 최선의 사회 형태이고, 노동자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고, 실업은 없애지 못하는 일이고, 이민자들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따위의 생각이 퍼진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다른 지적도 했다. “인간의 의식이 그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그의 의식을 결정한다.”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착취, 소외, 차별, 생산량 증가 압박, 일자리 지키기 투쟁 등을 겪는다는 뜻이다. 집단행동을 벌이며 단결하고 크고 작은 규모로 저항해서 얻은 성과, 그런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배운 교훈도 마찬가지로 의식에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지배적 사상과 실제의 현실이 모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노동자의 다수가 개혁주의적 관념을 지속시키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나 둘 사이의 균형은 사람들마다 다양하다. 그 결과 노동자의 다수는 개혁주의적이지만 소수는 완전히 혁명적이고 또 다른 소수는 완전히 반동적인 상황이 생겨난다.

지배적 사상과 실제 현실의 모순된 상호작용은 초보적 개혁주의 의식이 생겨나는 배경일 뿐, 완전히 발전해 조직적 형태를 갖춘 개혁주의를 다룰 때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개혁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을 구분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경제적 문제를 둘러싸고 직접적 계급투쟁을 벌이지만 다루는 쟁점이 협소하기 쉽다. 개혁주의 정당은 득표를 늘리는 데 주력하며 대중의 수동성을 부추기지만 전국가적이고 일반적인 정치 사상을 다룬다.

둘째, 개혁주의 조직에는 지도자들도 있고 기층 당원이나 조합원도 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둘 사이의 균형은 안정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중요한 파업이 승리하거나 위기 때문에 대중이 자본주의 친화적 이데올로기를 의심하는 때에는 지배적 사상의 설득력이 전보다 약해질 수 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노조 관료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투쟁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그런 투쟁이 일어나면 대중의 의식이 크게 바뀔 수 있다.

개혁주의와 관계 맺기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개혁주의의 뿌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개혁주의에 대응할 실천 방법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1905년 러시아 혁명을 분석하며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보수적 타성에 맞설 힘을 발견해 냈다.

1906년 출판된 《대중 파업》에서 룩셈부르크는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어떻게 스스로 변하는지를 강조했다. 대중 파업은 자본주의 친화적 사상뿐 아니라 노동계 관료들의 압박을 중화시키는 강력한 해독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대중 행동을 강조했고, 경제적 개선을 바라는 제한된 투쟁이 어떻게 정치 권력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고양될 수 있는지를 강조했다.

룩셈부르크는 대중 행동을 크게 강조하면서도, 혁명적 정당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독일 사회민주당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랐다. 1918년 독일 혁명으로 그런 바람이 틀렸음이 드러난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밀려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개혁주의적 입장을 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해도, 룩셈부르크는 그 가능성을 너무 크게 봤다. 그러나 개혁주의 정당 지도자들과 노동조합 관료는 그 사회적 역할 덕분에 착취를 겪지 않으며 지배계급과 대중 사이에서 중재자 구실을 하고, 실제 현실이 지배적 사상과 충돌하며 빛는 모순된 상호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을 혁명의 대의 쪽으로 설득하기를 바란 점은 틀렸지만, 룩셈부르크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조하고, 대중에게 스스로 변화되고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단절할



다른 곳보다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조금씩 살아나며 개혁주의 정당인 정의당이 성장하고 있다.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했다.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달리, 노동자들은 개혁주의적 방식에 기대어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노동자 다수가 이 점을 깨닫는 것은 혁명가들의 설교나 소수 혁명가들의 행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룩셈부르크는 개혁주의를 뛰어넘는 데서 노동

자 대중이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레닌은 룩셈부르크와는 다른 곳에 강조점을 뒀다. 앞서 살펴봤듯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레닌이 개진한 주장은 노동자 정당에서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중 어느 하나가 득

세할 수 있음을 함축했다. 노동자 정당에서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가 득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903년 레닌은 멘셰비키와 갈라서고 볼셰비키당을 건설했다. 당시만 해도 레닌은 이런 분열이 러시아에서만 필요한 일이라고 봤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을 거치며 레닌은 같은 접근법이 국제적 수준에서도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레닌은 공산주의인터내셔널(코민테른)을 창립하며 강력한 가입 조건을 제시했다. 그중 제2항은 이렇다. “공산주의인터내셔널에 가입하기를 바라는 조직은 모두 노동계급 운동의 책임 있는 직책에서 개혁주의적이고 ‘중간주의적’인 인사를 배제하고 … 공산주의자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공산주의인터내셔널

이 조항은 당시 상황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했다. 제2인터내셔널이 대표한 개혁주의는 완전히 파산했고, 공산주의인터내셔널이 “세계 곳곳에서 계급의식적인 노동자 압도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으며 매일매일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평가였다.

“계급의식적 노동자 압도 다수가” 러시아 혁명에 “공감”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노동자들이 즉시 개혁주의 조직과 결별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각국에서 신생 공산당이 성장했음에도 세계 혁명은 불발로 끝났다.

당시의 지도적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개혁주의로부터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1924년 트로츠키는 이렇게 지적했다. “혁명이 대성공을 거뒀음에도 [계급]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 당 없이, 당과 거리를 두고, 당을 제쳐두고, 당이 아닌 대용품을 가

지고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승리할 수 없다.”(《10월의 교훈》)

하지만 혁명적 정당을 창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역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혁명가들이 개혁주의로부터 분리하는 것과 혁명가들이 개혁주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둘 다 중요하다. 레닌은 두 가지 실천이 절대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우선 이렇게 주장했다. “프롤레타리아 정당은 옛 사회의 세력과 전통에 맞서려면 … 가장 엄격한 민주집중제와 규율이 필요하다. … 투쟁으로 단련된 강철처럼 단단한 당이 없으면 … 투쟁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레닌은 ‘공동전선’ 전술들을 강조했다. 혁명가들이 당면 투쟁에서 개혁주의자들과 함께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을 종합해 레닌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혁명적 정당이 없으면, “승리를 향한 전진을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 그러나 [혁명적 정당이 있어도] 승리는 꽤나 멀리 떨어져 있다. … 승리하려면 대중이 몸소 정치적 경험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모든 위대한 혁명의 근본 법칙이다.”(《좌익 공산주의: 유치증》)

레닌과 마찬가지로 트로츠키도 개혁주의로부터 분리하는 것, 개혁주의와 관계 맺는 것 둘 다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람시는 이렇게 주장했다: 공산당을 건설해 “노동계급의 선진적 부위를 규합”하는 것은 “근본적 과제”이다. 그러나 “그 당이 혁명적 기구임을 ‘자처’하는 것과 계급을 이끌 능력이 있느냐 여부는 직결돼 있는 것이 아니다. … 대중 속에서 활동한 결과로서만 그 당은 대중에게 ‘우리의’ 당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 회의

역사의 검증

일상적 시기에 노동계급 다수는 개혁주의를 받아들이고, 혁명가는 소수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일종의 딜레마를 겪는다. 한편으로, 사회를 아래로부터 변혁하려면 대중 정당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혁명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혁명적 정당의 필요성을 희생시키면 혁명 프로젝트는 재앙으로 끝나고 만다.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내놓은 처방은 세 단계로 이뤄져 있다. 첫째, 개혁주의 문제를 엄격하게 인식하기. 둘째, 개혁주의와 조직적으로 분리하기. 셋째, 공동전선 전술.

여기서도 역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대표자 8백87명이 모여 제2인터내셔널 대회를 열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러시아 등지에서 온 대표자들은 유럽 전역의 노동자 수백만 명을 대표했다. 대표자들은 임박한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자 결의문은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유럽이 애국주의 광풍에 빠진 전쟁 초기, 오로지 극소수 혁명가들만이 원칙을 지키며 시류를 거슬렀다. 러시아에서는 레닌이, 독일에서는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가 전쟁에 반대했다. 국가 이익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혹독했다. 국가 탄압, 대중의 조롱, 물리적 폭력이 뒤따랐다. 레닌은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고,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는 수감됐다. 그들의 주장은 옳았지만 어느 곳에서나 혁명가는 줄어들었다.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나기 단 몇 주 전에만 해도 레닌은 자신의 생애에는 혁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이었다. 제국주의 전쟁을 끝냈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사회주의 혁

명의 문턱까지 이끌고 간 출발점은 소수의 혁명가들이 혁명적 정치를 확고히 지킨 것이었다.

이처럼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길을 연 것은 러시아의 볼셰비키당이였다. 볼셰비키당은 러시아를 전쟁에서 끄집어냈고 노동자 국가를 세워 전 세계를 고무했다. 하지만 극심한 후퇴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1917년 2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에서 볼셰비키 소속 대표자는 전체 1천 명 중 60명밖에 안 됐다. 그럼에도 1917년 10월 볼셰비키당은 러시아 노동계급에게 혁명의 필요성을 설득해 냈다. 볼셰비키당이 러시아 노동계급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의 규모보다는 원칙 있는 정치적 주장과 개입주의적 조직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얻은 원숙함 덕분이었다.

원칙과 원숙함

차르 왕정을 타도한(1917년 2월) 직후 대중의 일반적 정서는 사소한 차이는 덮어 두고 단결하자는 것이었다. 볼셰비키당은 이를 거슬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룩셈부르크가 《개혁이나 혁명이나》에서 지적한 것, 즉 개혁주의와 혁명적 정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멘셰비키당과 사회혁명당은 전쟁을 지속하고 토지 개혁을 미루고 자본주의를 지속시키자고 했다. 레닌의 ‘4월 테제’를 채택한 뒤의 볼셰비키당은 “빵, 평화, 토지”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러나 원칙만으로는 부족했다. 전술들이 필요했다. 1917년 7월 페트로그라드의 급진적 노동자들은 봉기를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 노동자의 다수는 개혁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혁명 상황에서 노동자의 선진적 부위와 후진적 부위가 이렇게 어긋나는 것은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레닌은 고군분투했다. 이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일관성을 갖춘 조직인 볼셰비키당이 중요했다. 1917년 8월 말 코르닐로프 장군이 반혁명적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볼셰비키당은 공동전선 전술을 적용해 멘셰비키·사회혁명당과 함께 쿠데타에 맞서 싸웠고, 성공했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볼셰비키당은 소비에트에서 다수파가 됐다.

제1차세계대전의 공포가 모두에게 확실해지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제국주의 원칙을 옮겼게 지키고 있던 혁명가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독일 사회민주당이 독일 제국주의를 지지한 뒤 룩셈부르크는 독일 사회민주당이 혁명적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헛된 바람을 접고 ‘스파르타쿠스동맹’이라는 혁명적 정당의 중핵을 건설했다. 1918년 11월 독일 혁명이 일어난 뒤 스파르타쿠스동맹은 빠르게 성장했다. 1918년 12월 독일 노동자 평의회 대회가 열렸다. 하지만 볼셰비키당과 달리 스파르타쿠스동맹은 미숙한 신생 정당이었던 나머지, 개혁주의적 다

수를 자신들의 입장 쪽으로 설득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지 못했다. 노동자 평의회 대표자 4백5명 중 스파르타쿠스동맹 소속 대표자는 10명뿐이었고, 그조차 스파르타쿠스동맹의 이름을 걸고 당선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볼셰비키당과 스파르타쿠스동맹

하지만 스파르타쿠스동맹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었다. 독일 혁명이 사그라진 1924년까지 몇 차례 기회가 있었다. 스파르타쿠스동맹이 규모가 작은 것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는 경험 부족이었다. 러시아 볼셰비키당은 민주집중제를 바탕으로 십수 년에 걸쳐 일관된 조직을 건설하려 애썼다. 볼셰비키당은 불법, 반합법 등 여러 조건에서 활동하며 노동계급을 지도하려고 애썼다. 1905년 혁명처럼 투쟁이 대규모로 분출하는 시기도 겪었고 그 직후 찾아온 극심한 패배기도 겪었다.

독일 혁명이 일어난 뒤, 경험은 적지만 매우 열정적인 투사들이 스파르타쿠스동맹에 대거 가입했다. 그들은 독일에서 사회주의를 최대한 빨리 건설

하고 싶어 했지만, 정치적 경험도 일천하고 자신들의 사상을 어떻게 실천에 적용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들은 룩셈부르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룩셈부르크의 동료인 리프크네히트는 성마르고 경험 없는 소수 혁명가들의 압력에 휩쓸렸고, 스파르타쿠스동맹은 1919년 1월에 일어난 실익은 봉기에 끌려들어갔다. 이 봉기는 쉽게 고립돼 패배했고 그 뒤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 둘 다 살해됐다.

원숙함은 단지 오래 활동했다고 갓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로츠키가 《10월의 교훈》에서 강하게 주장했듯이, 혁명적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수성’은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17년 10월 봉기를 성사시키기 위해 레닌은 볼셰비키당의 경험 많은 선임 당원들과 투쟁을 벌여야 했다. 볼셰비키당은 갖췄지만 스파르타쿠스 동맹은 갖추지 못한 것은 물리적 활동 시간이 아니었다. 혁명가들이 당으로 조직돼 개혁주의적 다수를 설득하고 투쟁을 전진시키며 쌓은 조직적 원숙함이 부족했던 것이다.

결론

20세기 혁명가들의 성공과 실패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된다. 그 경험을 돌이켜볼 때, 개혁주의적 운동들에 녹아들거나 노동조합에서 자신의 사회주의적 신념을 감추는 혁명가들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반대로, 혁명만 되뇌며 개혁주의적 운동에 팔짱 끼고 있는 혁명가들도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개혁주의 조직이 대중의 개혁주의적 의식을 만든 것이 아니다. 반대로, 대중의 개혁주의적 의식이 개혁주

의 조직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대중의 개혁주의적 의식은 자본주의 하에서 그들이 겪는 여러 경험과 투쟁에서 비롯한다.

룩셈부르크가 보여 줬듯이, 개혁주의는 체제를 조금 손질할 뿐이지 체제를 폐지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혁명가들이 옆에서 설교나 하고 혁명적 상황이 도래하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중이 개혁주의 사상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계속해

서 발생했다. 현재도 중요한 투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투쟁의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그 결과는 계급투쟁이 얼마나 발전하느냐, 혁명가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명확하냐, 혁명적 당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이 글은 Donny Gluckstein, ‘Classical Marxism and the question of reformism’, *International Socialism* 143 (Summer 2014)를 참고해 작성했다.

냉전 후 역사를 통해 보다

‘미사일 방어’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짓말

김종환

‘미사일 방어’의 역사는 냉전 시대 핵무기 경쟁과 동전의 양면이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을 코앞에 두고 미국은 일본에 두 차례 핵폭탄을 투하했다. 이미 항복을 검토 중이었던 일본에 핵 공격을 한 것은 전후 세계 질서에서 자신이 패권을 쥐겠다는 것을 동맹국(당시엔 소련 포함)에게 과시하기 위한 성격이 있었다. 한편, 미국의 맞은 편에서 경쟁적 제국주의 블록을 구축한 소련은 노동계급을 쥐어짠 결과, 종전 4년 만에 독자적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로써 본격적인 핵무기 경쟁이 시작됐다.

핵무기 경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때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였다. 미국의 케네디 정부가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하려고 상륙 작전 등을 벌이며 도발하자, 쿠바가 소련의 핵미사일을 들여오려 하며 긴장이 치솟았다. 미국은 서유럽과 터키에 배치된 핵미사일을 동원해 소련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마지막 순간에 소련이 한발 물러서면서 ‘제3차세계대전’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훗날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미국 지배자들은 실제로 전쟁을 불사할 생각이었다. 미국 지배자들은 수도 워싱턴이 공격받는 것까지 감수할 작정이었다. 자국민이나 우방국 국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패권을 더 중시한 것이다.

‘미사일 방어’ 구상은 이처럼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미사일 공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핵 선제 공격을 위한 것이다.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면 상대방한테서 핵 보복을 당할 우려가 사라지므로 안심하고 선제 공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소련은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그러나 핵 선제 공격이라는 뻔한 목표에 대한 대중적 반발과 기술적·경제적 어려움으로 1972년 미국과 소련

은 ‘탄도 미사일 요격 제한’(ABM) 조약을 체결한다. ABM 조약은 ‘어느 나라도 자국 본토를 모두 포괄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타워즈’

그러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경쟁은 (시장 경쟁과 마찬가지로) 상호 합의로 간단히 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결코 ‘공포의 균형’에 만족하지 않는다. 예컨대, 1976년 미국 지배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다시금 미사일 방어 개발의 불을 지폈다.

“소련의 무장 속도는 ... 상호 역지에 필요한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게 분명하다. ... 10년 안에 소련이 일정한 수준의 군사적 우위를 점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냉전 종식 후, 미국 국방부는 당시 분석이 “소련의 공격 의도를 과장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1979년 미국의 핵심 중동 파트너였던 이란에서 반제국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같은 해 소련이 이란에 이웃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의 중동 패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 결과, 미국 대통령 카터는 1980년 1월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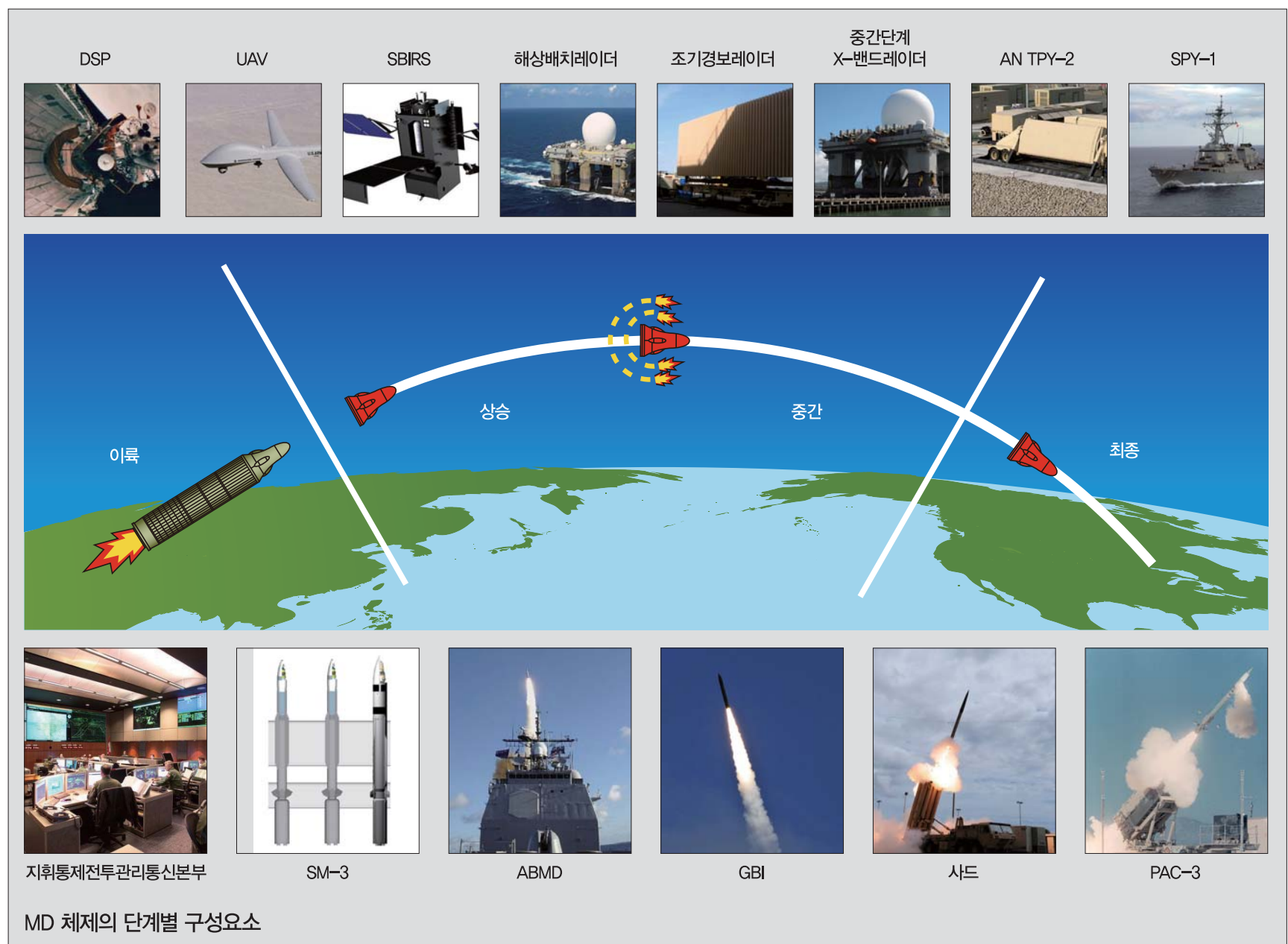
다”는 독트린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소련의 중동 진격을 막기 위한 전술 핵무기 사용을 승인하는 대통령령 제59호에 서명한다. 여기에는 소련이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미국 지배자들의 오판도 작용했다.

1981년 신임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매우 노골적인 우파 인사였다. 그는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유럽을 무대로 “제한된 핵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오만하고 호전적이었다.

레이건은 소련의 핵무기 사용을 자제시키는 데 만족할 수 없고 더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핵무기 균형을 깨뜨리고 미국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목표 아래 1983년, 우주에 레이저 발사체를 설치해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발시킨다는 ‘전략 방위 구상’(SDI)을 발표한다. SF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런 구상은 당시 유행하던 할리우드 영화 시리즈 제목을 따 ‘스타워즈’라고 불렸다.

우주에서 레이저나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구상은 이후 현실적이지 않다고 여겨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거듭 폐기된다. 그러나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한다는 ‘미사일 방어’ 계획은 냉전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냉전 종식 이후 오히려 더 확대된 미사일 방어 계획

1991년 소련 붕괴로 냉전이 끝났지만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양대 블록 구도가 해체되면서 주요 서방 강대국들의 동상이몽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미국은 경제력 면에서 일본과 독일에, 나중에는 중국에게 빠르게 뒤쫓기고 있었다. 미국 지배자들은 이들 국가가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그래서 냉전 직후인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클린턴 정부는 발칸반도를 거듭 폭격함으로써 옛 소련 블록 소속 국가들에게 군사적 우위를 과시했다. 세르비아를 폭격한 직후인 1999년 여름에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국가 범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현 배

치한다’는 내용의 ‘국가 미사일 방어’(NMD)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ABM 조약 위반이었다.

미국 지배자들은 냉전 때 소련의 위협을 과장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거나 군사행동을 벌였는데, 냉전 해체 후에도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와 북한의 핵 개발(냉전 시작만 하더라도 북한은 제대로 된 핵 기술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지 못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불량국가’들의 위협을 내세웠다.

한편, 미국의 ‘미사일 방어’ 구상은 다른 핵 보유국들에게 핵미사일을 개량하도록 부추길 것이 뻔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 확보한 핵미사일이 ‘미사

일 방어’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리 없기 때문이다.

1999년 12월 1일 유엔 총회는 ABM 조약을 엄격하게 준수하라는 결의안을 80 대 4로 통과시켰다(반대표를 던진 네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알바니아, 미크로네시아였고, 프랑스를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기권했다).

각축장

2001년 1월 미국 대통령이 된 조지 W 부시는 유럽을 순방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지지를 구했다. 같은 해 3월 독일은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것에 “핵심적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미사일 방어’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같은 해 6월, 마침내 조지 W 부시는 “ABM 조약은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ABM 조약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1년 후 실제로 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다. 당시 미국의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은 이런 행보가 국제 핵무기 경쟁을 부추겨 “중국의 핵무기 규모를 10배 이상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동아시아가 군비 경쟁 각축장이 될 것을 예견한 것이다.

2001년 9월에 때마침 터진 9·11 사태는 ‘미사일 방어’에 대한 국내 반대를 뒤집는 정치적 ‘호재’가 됐다. (비록 ‘미사일 방어’는 9·11 같은 테러를 막는 것과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말이다.)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미사일방어망의 한 요소를 이루는 사

드는 2008년 미국에서 첫 실전 배치된다.

한편 미국은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배치를 미국 영토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름을 NMD에서 MD로 바꿨다(머릿글자 N은 미국 영토를 지칭했다). 오늘날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 견제하려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MD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상의 역사가 보여 주듯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군사적 공세와 보조를 맞추며 진행됐다. ‘미사일 방어’는 평범한 사람들을 전쟁 위협에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과 군사적 우위를 지키려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독일 수병들이 일으킨 반란은 독일 전역으로 번져 전쟁을 끝내고 혁명으로 이어졌다. 팻말에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고 쓰여져 있다.

제1차세계대전 종전

혁명적 노동자 운동으로 전쟁이 끝나다

김종환

동아시아 등지에서 제국주의 간 경쟁이 증증하는 오늘날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안은 무엇일까? 1백년 전 제1차세계대전 중에 혁명적 노동자 운동은 전쟁과 자본주의에 맞서 승리한 경험을 했다. 이 경험에서 배워 보자.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각국은 평화를 위해 참전한다고 선언했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전쟁 초기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전쟁을 지지했고 또 기계이 자원했다. 전쟁에 반대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고립됐다.

이런 상황을 뒤집은 것은 바로 전쟁의 참상이었다. 전선은 대량 살육의 현장이었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가망은 보이지 않았다.

병사들은 자신과 똑같은 생지육을 경험하는 다른 나라 병사를 적으로 여겨야 할 필요를 못 느꼈다. 장교들이 승인하지 않은 병사들 간의 비공식적 휴전이 속출했다.

이런 정서는 후방에도 전달돼 징집에 어려움을 낳았다. 영국에서는 이전까지 징집 제외 대상이었던 금속노동자 가운데 1명에게 징집 명령이 떨어지자 금속노동자 1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당시 군 당국은 징집 명령을 거부하는 병사나 노동자를 총살할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병사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도전하면 그 러기 어려웠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3월(러시아력으로 2월) 항명에 나선 병사와 선원, 파업에 나선 군수품 공장 노동자들이 전제군주 차르를 몰아냈다. 이 혁명은 유럽 전역에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영국·프랑스(러시아의 동맹국), 독일(러시아의 교전국)에서 러시아인들에게 연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1917년 4월 프랑스군 내부에서도 대규모 항명이 벌어져 군대가 마비됐다. 대규모 자살극으로 끝날 것이 뻔한 작전 수행을 병사들이 거부한 것이다.

2월 혁명 후 들어선 러시아 임시정부는 여전히 전쟁을 이어가다 결국 11월(러시아력 10월)에 또 한차례 벌어진 혁명으로 전복됐다. 노동자 정부가 새로 들어섰다. 러시아는 10월 혁명 40일이 채 지나지 않아 독일과 휴전하고 전쟁에서 빠져나왔다.

러시아의 노동자 정부는, 진정한 희망은 독일 노동자와 병사를 살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혁명으로 설득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미 독일과 그 동맹국들에서도 대중 파업이 일어난 바 있다. 게다가 당시 독일군은 탈

영 규모가 2백만 명에 달했다. 1918년 봄 ‘루덴도르프 대공세’를 성공시켰지만 진격한 지역을 지킬 병사가 부족할 정도였다.

결국 1918년 10월 쾰른에서 독일 수병들이 일으킨 반란을 시작으로 독일 전역으로 반란이 번졌고 도시 노동자들이 가세했다. 독일 황제 카이저는 물러나야 했다. 불과 이틀 만에 제1차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다. 혁명이 전쟁을 끝낸 것이다.



제1차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반전 영화들

위대한 환상

장 르누아르, 1937년

당시 독일의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인종과 계층, 국적을 초월한 연대를 다뤘다. 영화 제목 위대한 환상은 ‘제1차세계대전이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말을 꼬집는 것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티앙 카리옹, 2005년

1914년 크리스마스 당시 참호에서 대치 중이던 양쪽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와 우애를 나누고 일시적으로 휴전에 돌입한 실화를 훌륭하게 표현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루이스 마일스톤, 1930년

우연히 같은 참호에 있게 된 양 진영 병사들이 나누는 우애를 볼 수 있다. 80여 년 전 영화지만 스케일과 디테일에서 최근 영화에 뒤지지 않는다.

영광의 길

스탠리 큐브릭, 1957년

생사를 가르는 전장에서 사병과 고위 장교 사이의 처지가 충돌한다는 것을 훌륭하게 묘사한 영화. 프랑스군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압력으로 1975년까지 상영되지 않았다.

자본주의 전쟁의 근본적 약점

모든 군대는 병참이 뒷받침되어야만 유지된다. 마르크스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그의 시 ‘장군님의 탱크는 막강한 차입니다’에서 썼듯이 “한 가지 약점은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벌이는 일은 모두 노동자들에 의존하고, 전쟁도 예외가 아니다. 평화를 달성하려면 자본주의 전쟁의 바로 이 약점을 파괴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적, 즉 자국 지배계급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제1차세계대전 동안 영국 지배자들은 영국인들에게 독일의 카이저가 얼마나 폭압적이고 군국주의적인지 설파했다. 분명 카이저는 악당이었고 노동자들의 적이였다.

그러나 영국 제국도 잔혹하기는 마찬가지였고, 독일 지배자들은 독일인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했다. 영국 노동자들이 독일에 맞서 싸우면 영국 제국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었고, 독일 노동자들이 독일 지배자들에 등 돌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반대로 영국 노동자들이 영국 지배자들에 반기를 든다면 독일에서도 같은 행동을 고무할 수 있었다.

제1차세계대전의 주요 참전국 중 맨 먼저 패배한 나라인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바로 그 패전 덕분에 가장 많은 것, 즉 권력을 얻었다.

미사일이나 핵무기 증강은 전쟁을 막거나 끝내지 못한다. 애당초 전쟁을 낳는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야만 전쟁을 없앨 수 있다.

새로 나왔습니다



점거파업 역사와 교훈

데이브 셰리 지음,
이재권 옮김,
책갈피, 240쪽,
10,000원

점거파업은 세계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

노동운동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그야말로 다양한 전술이 사용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압권은 생산을 멈춰 이윤에 타격을 주는 ‘파업’인데, 파업에도 작업 중단, 점거파업, 부분파업, 전면파업, 필공 파업, 시한부 파업, 살행이(비공인) 파업 등 여러 종류와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노동자들이 몸소 일터를 점수해 사장과 관리자를 내쫓는 ‘점거파업’은 예부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노동운동의 발자취에도 굵직한 직장 점거 사례들이 있다. 2007년 뉴코아·이랜드, 2009년 쌍용자동차,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2011년 대학 청소 노동자와 유성기업 등 최근까지도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직장 폐쇄, 열악한 조건에 맞서서 자신의 일터를 점거했다.

그러나 직장 점거는 싸우려는 노동자들이 늘 선택하는 전술은 아니었다. 점거파업이 통상적 파업보다 훨씬 대담하고 결연한 집단 행동이라서 결정 당사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점거파업은 흔히 해고, 무급 휴직, 폐업에 맞닥뜨린 절박한 사람들의 도구였다. 또 점거에 나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관료주의나 좌파의 정치적 오류, 점거 확산 거부 탓에 쓰라린 패배를 겪기도 했다.

일터를 점거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 책이 쓰여진 2009년은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온 세상을 덮친 직후였다. 때마침 노동계급을 더욱 쥐어짜려는 세계 지배자들의 시도에 맞서 곳곳에 저항이 벌어졌다. 점거파업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취한 두드러진 방식이었고, 점거 투쟁의 효과가 다시 한 번 입증되기 시작했다.

세계 노동운동의 결정적 순간마다 파업과 점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고 쉽게 정리했다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여러 나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새 “점거파업은 사회주의자들과 투사들이 일찍이 관여한 산물이구나!”, “세계 노동자들이 서로의 투쟁에 고무받으며 배웠구나!” 하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지은이 데이브 셰리는 단순히 점거파업의 효과와 역사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은이는 불황과 저항의 관계를 설명하며 불황기에도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운다면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점거파업이 대중적으로 벌어지는 곳에서 노동자위원회, 노동자 통제 같은 의제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이 그 성패의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2016년 오늘까지도 세계경제 위기는 좀처럼 회복될 낌새가 없으며, 한국의 지배계급도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그렇다고 몇 년 전처럼 곳곳에서 점거파업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지배자들은 머지않아 구조조정과 폐업이라는 칼날을 깊숙이 들이밀 것이다. 여기에 맞서서 투쟁하려는 노동자들과 그런 투쟁에 연대하고 동참하려는 활동가들한테 이 책이 작은 길잡이이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재권 옮김이, 노동자연대 회원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김현옥 전교조 조합원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학구조조정,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들의 수요에 걸맞는 노동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강화하려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재정 긴축으로 교육 비용을 노동계급 가정에 떠넘기려 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저출산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축이 아닌 대학평가에 의한 등급별 정원 감축이다. 대학평가를 통해 인문계 기초교양 학과는 통·폐합해 축소하고 이·공계 학과는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 목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 내용도 산업 수요에 끼워 맞추려 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과 산학협력 5개년 계획,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등이다.

대학에서뿐 아니라 중등교육에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도입하려 한다. 도제교육을 희망하는 특성화고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 과정을 모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적용해 기업들의 인력 수요를 교육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다.

박근혜의 교육 ‘개혁’ 목표가 기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배출하고자 한 것임은 이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길러 줘야 한다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직업교육의 맥락에서 연구돼 온 개념이다.

이는 경제 위기 시기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지배계급의 해법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춰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꼭 모든 학생이 대학 갈 필요는 없다!

이번 업무계획에서 강조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실시도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특권교육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조기 직업교육 강화의 일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에서는 특권교육, 다른 한편에서는 직업교육의 강화는 평등교육을 공격하는 것으로 노동계급 자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별교육은 한편에서는 지배계급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계급으로 미리부터 사회적 차별을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학교 교육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즉 계급을 재생산



노동계급 자녀는 어릴 때부터 눈높이를 낮춰 살라는 박근혜의 ‘교육 개혁’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본가들과 국가 관료들은 교육이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고 자본주의의 필요에 맞춰 교육 정책을 추진해 왔다.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자본주의와 학교교육》을 쓴 미국의 급진적 학자들인 보울즈와 진티스는 “교육의

조직은 직업의 구조 또는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응한다”고 봤다. 이를테면 교육제도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또는 산업기술의 발달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러한 직업학교가 “학생들의 운명과 장래 활동이 미리 결정”돼 “사회적 차별을 영속”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람시는 “육체노동을 위한 능력의 개발과 지적 노동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할 보통기초교육, 즉 통합교육에 바탕한 전인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에서 교육은 이데올로기적 기능도 수행한다. 기업의 입맛에 맞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려면 자본주의적 세계관이 교육 과정을 지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도록 하는 사상과 관념도 가르친다.

물론 현실과의 모순 때문에 교육만으로 노동계급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한다. 또, 창의력을 억누르는 억압적 교육만으로는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에 걸맞는 숙련 노동자를 키워 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 위기는 이런 고려사항을 모두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당장의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급박함 때문에, 임금과 노동력, 생산성 문제에서 지배자들은 더욱 단기적 전망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면,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교폭력을 과도하게 부각하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도 인성이

부족한 개인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또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내세워 국정교과서와 입시에서 필수화된 한국사 시험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제국주의와 시장주의를 예찬하고자 함이다.

교육 재정 긴축

경제 위기 시기, 박근혜 정부는 교육 긴축을 통해 노동계급 가정에 교육재정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 무상보육 예산 전액 삭감,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공격,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교육긴축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법을 고쳐서라도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 조기에 편성하겠다고 한다. 이미 정부의 예산 삭감 때문에 무상보육을 위해 전용된 교육청 예산이 적지 않다. 그 효과로 교수-학습 지원비와 교육환경 개선비가 삭감되고 학교비정규직이 해고되는 등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에도 교육청이 무상보육 예산을 떠안다 보니 학교별로 학교운영비가 삭감돼 교육환경 개선,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층 학비 지원, 급식시설 개선 등 다른 필요 예산을 삭감해야 했다. 무상보육이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1조 6천억 원의 초·중고 예산이 누리과정에 전용됐는데, 같은 기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 원 늘었을 뿐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학교정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게다가 지금 당장은 기간제 교사만 공격하고 있지만, 이

후 시간제 일자리 등 저질 일자리로 교원을 충원하면 정규직 교원들의 노동조건도 악화될 것이다. 전교조 비정규직 교원들의 문제에도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학교 규모를 ‘적정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급 기준을 고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강원·전남·경북은 초등학교의 절반이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현재 OECD 가입 국가의 교육 관련 통계 중 한국은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과 ‘학업 흥미와 자신감’ 등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자살률’과 ‘개인 부담 공교육비’ 등에서 부끄러운 일등을 했다. 학급 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기준에 못 미치고, 공교육비 지수는 34개국 중 초등은 22위, 중등은 25위에 불과하다.

공교육비인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 교육예산도 최소한 GDP 대비 6퍼센트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노동계급의 가정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주들에게서 세금으로 거둬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오히려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자본가들과 지배계급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전면적 인간 발달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꿈과 끼를 키워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서지애 전교조 조합원, 초등학교 교사

집단 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교육청은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사실상 2016~19년에 영전강 1백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반대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감 직고용 등 고용 안정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며 1월 13일부터 제주 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제주 교육청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경찰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진보 교육감인 이석문 제주 교육감이 영전강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광주 지역에서 5년간 일한 영전강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직후에 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전강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4년 이상 근무한 영전강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 제도를 폐지하고, 영어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영전강 해고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직후에 해고 발표를 한 것을 봐도 이는 영전강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 교육청은 부산 교육청이 영전강들에게 내걸었던 방식(토익 9백10점, 교원자격증 소지 등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을 교섭안으로 제시해, 영전강 비정규직 교사들의 울분을 자아냈다.

본래 영전강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영어 몰입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영어 수업시수 증가에 따라 나온 제도이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를 뒤 기간제 2년 사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우회해 4년 동안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는 꼼수를 썼다.

박근혜 정부는 영전강을 4년 계약 만료 이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기간제 노동자가 되도록 했다. 평생 비정규직 신세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영어 몰입 교육정책의 일환이자, 비정규직 제도인 영전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 교육감이 영전강 제도 폐지를 이유로 영전강을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석문 교육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영어를 배워야 했던 학생들뿐 아니라 해고 불안 속에서 영전강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교사들도 영전강 제도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의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영전강 제도는 폐지하고 영전강 노동자들의 고용은 보장해야

이러한 영전강 집단 해고와 그에 맞선 영전강의 투쟁이 있을 때마다, 전교조 내부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초등의 전교조 활동가 상당수는 영전강 제도 폐지와, 영전강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요구는 모순이므로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영전강 제도와 영전강 비정규직 교사들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영전강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영전강에 대한 고용 대책은 정규 수업이 아닌 업무로만 보장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운동의 ‘비정규직 철폐’ 요구가 ‘비정규직 해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제도 철폐는 마땅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신규 채용안을 반대하며, “불법 파견 철폐하고,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전교조 활동가들은 지지해 왔다. 그런데 왜 학교 안에서 함께 일하는 영전강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지지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가?

영전강 제도 폐지를 위해 영전강의 집단 해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전교조 활동가들은 이런 모순에 처해 있다.

물론 교육적으로 보더라도 영어 몰입 교육에 따른 영어 수업시수 증가와 비정규직 확대에 이용된 영전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쁜 제도와

그 제도로 인한 희생자는 구분해야 한다. 영전강 제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어디까지나 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돌려야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영전강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년 해고 불안에 시달리며 천대 속에서 일해 온 영전강 교사들은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자 정규직 교사들이 연대해야 할 동지다.

따라서 정규직 교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영전강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그런데 적잖은 전교조 활동가들은

영어 몰입 교육의 일환으로 나온 영전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기에, 영전강의 노동이 불필요하므로 해고는 당연하다고 본다. 또 영전강의 무기계약직 요구는 영전강 제도의 존속을 낳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거 영전강 비정규직 교사들이 영전강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반발과 불신을 가지고 있다.

영전강은 고용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의 존속이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주장하곤하는데, 물론 영전강 제도 또는 영어 몰입 교육이 영어 공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영전강

측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주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봐야 한다.

영전강 제도 폐지와 영전강 고용을 대립시키며 정규직 교사들이 기존 영전강의 고용 보장 요구(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면,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시키려는 정부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정규직 교사들이 제도 폐지와 고용 보장을 함께 요구해 비정규직 교사들과의 단결을 확대한다면 이후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투쟁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1월 13일부터 제주 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인 영전강 노동자들 노동계급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영전강 고용 안정을 지지해야.

배타적 전문성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협력적 전문성이 참교육의 이상에 맞다

안타깝게도, 상당수 전교조 활동가들은 영전강은 교직에 대한 전문성이 불충분하므로 교단에서 몰아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분명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필요하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교과를 통합적으로 아동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전강도 정규직 교사로서 필요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이 꼭 교육대학을 나오고, 임용고사를 통과함으로써 갖추어지는 것인가?

전교조의 참교육 철학을 보더라도 전문성 함양은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교사 간 협력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성장함으로써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

가 전교조 강령을 보더라도, 참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제도에 맞서 교사들이 단결 투쟁하는 것이 참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직뿐 아니라 어떤 부분의 노동이라도 각각의 전문성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전문성이 배타적인 직업 전문주의를 뜻한다면 노동자들 간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노동계급 투쟁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임용고사를 통한 교사 선발 경쟁 체제이다. 교사 임용고사는 노태우 군사 정권 시절 법제화된 제도로, 임용고사가 생긴 이후 한층 강화된 경쟁으로 인해 교사 노동의 소외와 교사들 간 갈등이 심화됐고, 교육운동에도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다.

교육 전문성 측면에서도 임용고사

는 도입 시점부터 타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제도였다. 그래서 전교조도 도입 당시 임용고사 방식의 교사 선발 경쟁 체제에 반대했었다.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를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전강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면, 학교 안에 수많은 비정규직 교사들과 분열을 초래해 기간제 교사제도 저지나 정규직 교사 충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학교에는 기간제, 기간제 강사 등을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미 20만 명이 넘는다. 정규직·비정규직 교사 간 분열이 깊어지면 정부의 부당한 교육 정책과 학교 관리자의 횡포에 맞서는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약화돼 전교조에도 해롭다.

따라서 영전강 고용 안정 문제는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실 학생들과 눈빛을 한 명, 한 명 교환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2013년 기준)는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6명인데, 이에 비해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높은 편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5.3명, 중학교 30.8명이다. 한 교사가 맡는 과다한 수업과 학생 수는 ‘저출산 시대’인데도 교육재정 삭감의 압력 속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 비정규직 교원 제도 폐지와 정규 교원 충원, 비정규 교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 노동자들이 단결한다면 우리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전교조 탄압에 맞서며 정규 교원 충원을 강제할 힘을 키울 수 있다.



임금 삭감 공격에 나선 정부와 기업주들

박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와 기업주들의 임금 삭감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위한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그 길을 닦았다. 그리고 실제 노동 현장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관할하는 공무원·공공기관·금융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에 착수했다.

이 같은 공격에서 민간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월 2일 발표한 '2016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안에서 임금 삭감을 위한 세 가지 기본 방침을 제시했다.

첫째, 올해 임금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대졸 정규직 초임(고정급)이 3천6백만 원 이상인 기업은 이를 삭감한다.

셋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전면적 전환이 어려울 경우, 부분적·단계적으로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시켜 나간다.

경총은 특히 올해 사업의 초점을 임금체계 개편에 맞추고 대규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총 회장 박병원은 "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고 직무급과 성과급으로 대표되는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급제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지배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특히 1997년 IMF 위기를 전후로 기업주들은 "임금을 다른 자본재와 마찬가지로 투자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고 요구했다. 이는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더 강화됐다.

연공급제는 한국 경제가 잘 나가던 시절에 기업주들이 젊은 노동자들을 싼 값에 유인하고 붙잡아 두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장기 근속자·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특히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담은 더 큰 무게로 여겨졌다.

노동조합의 협상력도 지배자들에게 커다란 골칫거리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조의 힘이 증대하고 인사고과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성과에 따른 승급·상여금 등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업이 늘어났다. 노동자들은 해마다 집단적으로 임금 인상 투쟁을 벌여 기업주들을 압박했다.

물론 IMF 위기를 전후로 저임금층인 비정규직이 대거 늘어나고 임금 인상이 점점 낮아지고 성과급 요소도 늘었지만, 기업의 이윤이 크게 압박 받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임

금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지배자들에게 중차대한 과제다.

이를 관찰하기 위해 지배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한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훨씬 못 미쳤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래로 생산성이 증가해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실질임금 인상률과 생산성 증가율 사이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림 참고)

지배계급과 노동자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도 점점 확대됐다.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4퍼센트에서 2002년 58.2퍼센트로 감소했다가 2014년에 62.6퍼센트로 IMF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노동자들의 상대적 지위가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임금 노동자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옳게 지적했다. "노동자들 머릿수는 절반 가까이 늘었는데, 가져가는 몫은 똑같은 것이다."

임금 몫

그런데도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임금 몫을 더 줄이려고 한다. 성과급제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앞서 이 제도가 도입된 사례들이 잘 보여 준다. 2010년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KT에서는 고과 평가에서 하위·최하위 등급을 받은 노동자 20퍼센트가 해마다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됐다. 2003년 독일 금속산업에서 직무·성과급제가 전보다 강화됐는데, 그 결과 노동자 60퍼센트 가까이가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은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관리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전환배치,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조건을 악화하려는 사측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끊임 없는 경쟁 압력 속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단결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저항도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주들의 임금체계 개악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방어하고 노동조건을 지키고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을 유지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일각의 오해와 달리, 임금 공격은 공공부문·대기업 정규직만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관철한 데 이어, 올해 3백인 미만 민간기업으로 공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는 '낮은 직무에 낮은 임금'이라는 논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기제로도 작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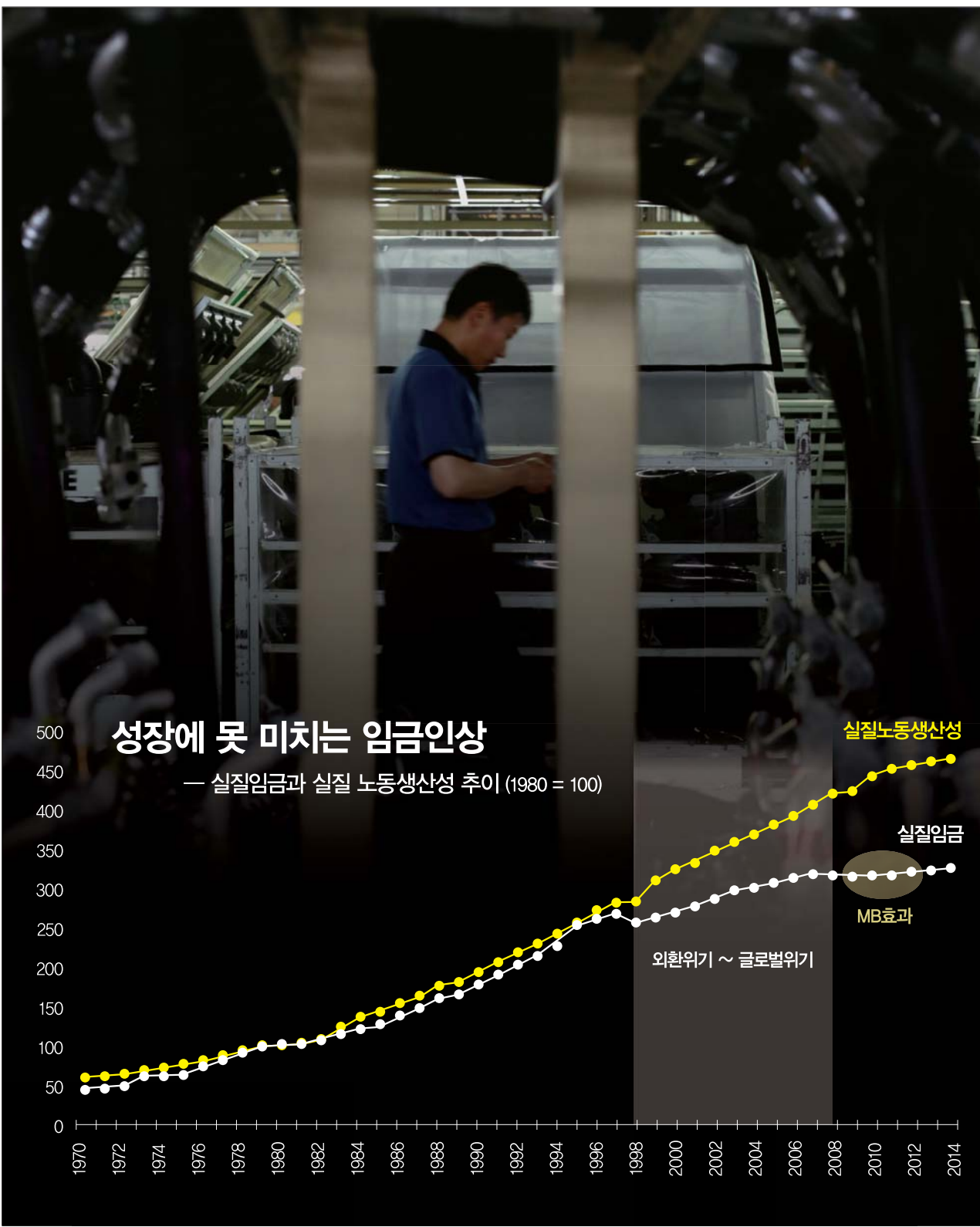


그림. 출처 《한국의 노동 2016》, 김유선

이처럼 정부와 기업주들이 일치단결해 노동시장 전반에 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하고 나선 만큼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잘 조직된 노조들이 이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각 현장에서 사측의 공격에 맞서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네, 이럴 때 공공부문·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방어를 더 부시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들이 단호하게 싸워 공격을 막아 낸다면, 전체 투쟁 전선에 좋은 자극을 주고 많은 노동자들에게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부분적·단계적 공격을 통해 임금체계 개악을 관철해 나가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경총은 임금체계 개악 시 기존 노조의 저항을 피해 우선 신입사원들에게 먼저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조합 운동은 한 부분에 대한 공격이 종국에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신입사원 이중임금제를 거부해야 한다.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일시 : 2016년 2월 29일(월) 오후 7시



연사 : 이호중 세월호 참사 특별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소 : 연세대학교 백양관 S208호

참가비 : 5,000원 (대학생 할인가 3,000원)

주최 :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
주관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workerssolidarity.org.

